



**북핵일지**

1955 ~ 2014

조민 · 김진하

1955

2014

## 북핵일지

인 쇄 2014년 10월  
발 행 2014년 10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최진욱  
편 집 인 기획조정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1 (팩스) 901-254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 · 디자인 · 인쇄처 (주)현대아트컴 (02-2278-4482)

ISBN 978-89-8479-768-0 93340  
가 격 비매품

© 통일연구원, 2014

# 북핵일지



북한의 비핵화는 국제 사회 최대의 관심사이자, 한국의 대북·통일정책의 핵심이다. 북한은 일찍부터 핵개발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1990대 초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본격적인 핵개발 노선을 택했다. 세 차례의 핵실험은 북한의 집요한 핵보유 의지의 소산이다. 이에 통일 연구원은 북한 핵문제 이해를 위해 북핵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 북핵일지를 정리하였다. 향후 북핵 문제의 진전에 따라 북핵일지를 계속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1955 >>  
**북핵일지** 2014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Contents

1955~1965

1966~1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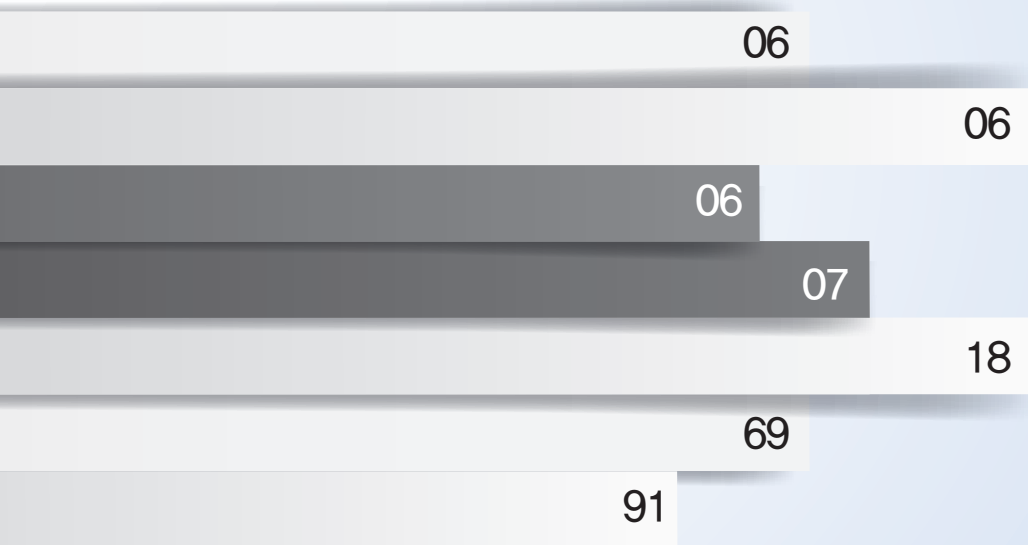
1977~1987

1988~1998

1999~2009

2010~2014

3차 핵실험 이후 미사일 및 발사(운반수단) 발사 현황



일 시	내 용
1955. 03	북, 과학원 제2차 총회에서 '원자 및 핵물리학연구소' 설치 결정
06	북,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회의에 과학원 학자 6명 참석
1956. 02. 28	북, 소련과 '연합 핵 연구소 조직에 관한 협정 (Founding Charter of the Soviet Union's Joint Institute for Nuclear Research)' 체결 (모스크바), 소련 드브나 (Dubna) 핵연구소에 북 과학자 파견, 방사화학연구소 설립
03	소련과 '조·소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 체결
1962. 11. 02	영변 원자력 연구소 설립
1963. 06	소련서 연구용 원자로(IRT-2000, 2MWe) 도입
1965	연구용 원자로 준공
1967	연구용 원자로 가동
1968	소련서 소형 임계시설 도입 (영변)
1974. 03	북, 원자력법 제정
09	북, 국제원자력협력기구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가입(한국은 '57년 8월 가입)
1976	이집트서 소련제 스커드 미사일(B형, 사거리 234km) 2기 도입
1977. 09	IAEA와 연구용 원자로 (IRT-2000)에 대한 '부분 안전조치협정' 체결
10	최초의 핵사찰 수행
1978. 11	북 전역 우라늄 탐사(약 2,600만 톤)
1980. 07	영변 5MWe 실험용 원자로 (흑연감속로) 착공 영변 중합핵시설 단지('86년 가동, '94년 동결, '03년 재가동)
1982. 11	박천 우라늄 정련 및 변환시설 가동
1983. 11	고성능 폭발실험 실시

일 시	내 용
1984. 04	스커드 미사일(B형) 시험발사 성공
1985. 11. 05	영변 50MWe 마그녹스 원자로 착공 ('95년 완공목표, '94년 중단)
11	평산 우라늄 정련 및 변환시설 착공 ('90년 완공목표, 미완공)
11	재처리시설 (방사화학실험실) 착공 ('89년 가동)
12. 12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가입 (한국은 '75년 4월 가입)
	소련과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경제·기술 협력협정' 체결, 440MWe급 (VVER-440형) 4기의 원자력 발전소 (함경남도 신포) 건설예정
1986. 01	영변 5MWe 원자로 가동 개시 (년 6kg 플루토늄 생산가능)
05	스커드 미사일 (C형) 시험발사 성공
12	정무원 산하 원자력공업부 신설
1987. 06. 05	IAEA, 안전조치 협정(안) 북에 전달
1989. 09	프랑스 위성 스팟2호 (SPOT: Satellite Probatoire d' Observation de la Terre), 영변 핵시설 촬영 및 공개
11	200MWe 원자로 착공 (태천) 영변 5MWe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약 8,000개, 25~50톤) 인출
1990	재처리 시설에서 대규모 Hot Test 실시
	청산 우라늄 정련 및 변환시설 가동
02	북, IAEA 이사회에 안전조치 체결 조건으로 대북 핵 불사용 및 불위협 명시를 요구
03. 06	IAEA 이사회, 북의 전면안전조치협정 체결 권고
09. 04~ 12. 14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3회)

일 시	내 용
11. 16	주UN 북 대사, “주한미군 핵과 동시 사찰시 IAEA의 사찰을 수락하겠다”
1991. 04	북, IAEA 핵안전조치협정 비준
06. 05	북·미 고위관리, 워싱턴서 첫 접촉
06. 11	북, “핵안전협정 문제에 관해 미국과 조건부 합의했다” 발표
06. 21~ 22	미 국제안보연구소 대표단 (단장: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방북, 북 군축 평화연구소 대표단과 토론회
07. 30	북 외무성, ‘한반도 비핵지대화 공동선언’ 제안
09. 12	IAEA 이사회, 북의 핵안전협정 조인 촉구 결의안 채택 (북 거부)
09. 21	IAEA 총회 ‘북한 핵안전협정 이행결의안’ 채택
09. 28	부시(George H. Bush) 미 대통령, ‘해외 전술핵무기 폐기 선언’ (현지 27일)
10. 22~ 25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10. 28	한·미, 주한미군 전술 핵무기 전면 철수 합의
11. 08	노태우 대통령,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발표
11. 25	북 외무성 성명, “주한미군 핵무기 철수 시 핵안전협정에 조인하겠다”
12. 11	한, 북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문’ 제의
12. 13	남·북, ‘불가침 교류 협력 합의서’ 서명
12. 17~ 19	스티븐 솔라즈(Stephen Solarz) 하원의원 방북, 김일성 주석 핵개발 능력도 의사가 없다고 피력
12. 18	노태우 대통령, “남한 내 핵 부재” 선언
12. 22	북 외무성, “핵안전협정 서명 및 사찰 수락하겠다” 성명



일 시	내 용
12. 26	남북 핵협상 고위급회담 1차 실무접촉 (판문점 통일각)
12. 28	남북 핵협상 고위급회담 2차 실무접촉 (판문점 평화의 집)
12. 31	남북 핵협상 고위급회담 3차 실무접촉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 (92. 2. 19 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li> <li>•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li> <li>•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li> <li>•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li> <li>•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li> <li>•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li> </ul>
1992. 01. 01	김일성, 신년사를 통해 '공정성 보장 시 핵사찰 수락' 옹의 피력
01. 07	북, '안전조치 협정' 서명 및 IAEA 사찰 수용 발표 한미 팀스피리트(T/S) 훈련 중단 발표
01. 22	북미 최초 고위급회담 (김용순-켄터, 뉴욕)
01. 30	IAEA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92. 4. 10 발효)
02. 19~ 03. 14	남북 고위급회담 대표접촉 (7차례)
02. 25	외교부 순회대사 통해 IAEA 핵사찰 수용
03. 19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발효,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JNCC: Joint Nuclear Control Committee) 설립

일 시	내 용
04. 10	북 최고인민회의- IAEA, 안전조치협정서 비준
04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 목사 방북
05. 04	IAEA에 최초보고서 (Initial Report) 제출 (7개 핵시설과 플루토늄 보유)
05. 28	미국자유연합대표단 (단장: 리처드 아이코드 하원의원) 방북, 김일성주석 면담
1992. 05. 25~ 1993. 02. 06	IAEA, 북에 임시 핵사찰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92. 5. 25~6. 5</li> <li>• 2차: 92. 7. 8~18</li> <li>• 3차: 92. 9. 19~11</li> <li>• 4차: 92. 11. 2~13</li> <li>• 5차: 92. 12. 14~19</li> <li>• 6차: 93. 1. 26~2. 6</li> </ul> <p>중대한 불일치 (Significant Discrepancy) 발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 5mme 흑연감속로 형의 실험용 원자로에서 1회에 걸쳐 소량(80~90g)의 플루토늄 추출</li> <li>• IAEA: 최소 3회 (89, 90, 91)의 재처리로 보다 많은 양 (kg단위)의 플루토늄 추출 / 방사화학실험실은 대규모 재처리시설, 2개 미신고시설은 재처리한 핵폐기물 저장소</li> </ul>
1992. 07. 02	미 국방부, 한국 내 핵무기 철수 완료 발표
12. 12	IAEA에 핵폐기물 보관 의심시설 2개 중 1개 육안사찰허용
12. 22	IAEA, 북에 2개 미신고시설 방문 허용 요청(북 거부, 93.1.5)
1993. 02. 09	IAEA, 북의 미신고시설 2개 '특별사찰' 수용 촉구(북 거부, 2.24)
02. 21	<노동신문> '특별사찰 강요하면 전쟁초래' 경고
02. 23	울시 CIA 국장, 미 상원 청문회에서 '북 최소 1개의 핵무기 제조 가능한 핵물질 보유' 주장

일 시	내 용
02. 25	IAEA 정기이사회, 북의 특별사찰 결의안 채택 (수락까지 1개월 시한)
03. 08	북, 준전시 상태 선포
03. 12	NPT 탈퇴 서한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출  한, '북한 NPT 탈퇴에 대한 성명' 발표 남북 간 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부속합의서 등 모든 남북 합의 사항의 신뢰성을 상실시키는 중대한 행위. 2. 25 IAEA 이사회의 핵사찰 허용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른 남북 상호 사찰에 응할 것을 촉구
03. 18	IAEA 특별이사회, 대북 결의안 채택 (특별사찰 수락 3월 31일로 연장)
03. 31	IAEA 특별이사회, 북의 안전조치 불이행의 UN 안보리 보고 결의 채택
04. 01	IAEA 이사회, '대북 결의안' 발표
04. 08	UN 안보리, 북핵문제 관련 '의장성명' 채택
05. 11	UN 안전보장이사회, 북의 핵사찰 수용과 NPT 탈퇴 철회 촉구 결의안 (825호) 채택
05. 17~ 21	'북미 고위급 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접촉 (카트먼·김종수)
05. 29	동해에서 노동 1호 (화성) 중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05. 29~ 30	북, 노동 1호 미사일 시험 발사
06. 02~ 11	1차 북미 고위급 회담 (갈루차·강석주, 뉴욕), 북, NPT 탈퇴 잠정 유보 (11일)  공동성명(Joint Statement)에서 핵불사용·불위협, 자주권 존중, 내정불간섭, 한반도 평화통일 지지 등 원칙 확인
07. 14~ 19	2차 북미 고위급 회담 (제네바), 북의 흑연감속로 및 관련시설을 경수로로 대체하는 문제 등을 논의

일 시	내 용
08. 04	한,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개최 제의(북 거부, 8. 9)
08. 31~ 09. 04	IAEA 사찰단 방북(제한된 활동)
11. 01	UN 총회, 즉각적 협조를 요구하는 대북 핵 결의안 채택
11. 11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북 핵협상 대표단장), 미국에 일괄타결안 제의
11. 14	북, '남북 핵통제 공동위원회' 중단
12. 01	북, IAEA에 전문 보내 "북한 핵 현황의 계속성 악화는 IAEA 측의 책임"
12. 03	IAEA 사무총장, 핵물질 전용여부 검증 불가능 선언
12. 29	북·미, 뉴욕 실무접촉서 핵사찰 수용 합의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 사찰 허용</li> <li>• 남북 실무회담 개최</li> <li>• 94년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li> <li>• 3차 북미 고위급회담 재개</li> </ul>
<b>1994.</b> 01. 07~ 02. 15	북·IAEA, 안전조치 유지를 위한 실무접촉 실시(7회)
01. 31	"미국이 북한 측에 핵 전면사찰을 계속 요구할 경우 NPT탈퇴 유보 결정을 철회" 경고
01. 27~ 02. 01	빌리 그레이엄 목사 방북
02. 15	IAEA, 북 핵사찰 수용 발표
02. 25	북·미, 핵사찰 합의 내용('93. 12. 29일자)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스피리트훈련 중단</li> <li>• 남북회담 재개</li> <li>• IAEA 사찰 개시(3.3~12)</li> </ul>
03. 03~ 14	IAEA, 북의 핵 의심 시설 7곳에 대한 사찰을 실시했으나, 북의 사료 채취거부로 재처리시설 추가건설 사실만을 확인

일 시	내 용
03. 03~ 16	1차(3일), 2차(9일), 3차(12일), 4차(16일) 남북 실무회담 개최
03. 19	5차 남북 실무회담서 박영수 북 대표, '서울 불바다' 발언
03. 21	IAEA 특별이사회, 북핵문제 안보리 회부 결정
03. 24	IAEA 사무총장, 북핵사찰 결과 안보리에 보고
03. 31	UN 안보리, 북 추가사찰 수락을 촉구하는 UN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04. 10	영변 5MWe 흑연감속로 가동 중단
04. 28	북, '정전협정 무효화, 군사정전위원회 탈퇴' 선언
05. 04	영변 5MWe 흑연감속로에서 연료봉 인출 (6월 15일 까지 약 50톤 8천여 개 인출)
05. 17~ 24	IAEA 추가/후속사찰 실시 북, 5MWe 원자로 폐연료봉의 임의 인출 감행
05. 27	한스 블릭스(Hans Blix) IAEA 사무총장, UN 안보리에 "북의 사용 후 연료봉 무단인출로 과거 핵활동 관련정보 습득 불가능" 보고  미 국무부, 3차 북미 고위급회담 취소 발표
05. 30	UN 안보리, 북에 핵 연료봉 인출에 관한 협상 촉구하는 의장 성명 채택
06. 10	IAEA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연 60만 달러의 기술원조 중단 및 대북 지원금 대폭 삭감)
06. 13	북, 'IAEA 탈퇴' 공식 선언, 이에 대한 제재는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 공표
06. 14	미, 장관급 회의 중 '대북 공격(Osirak Option)' 검토

일 시	내 용
06. 15	미, UN 안보리에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제시 1단계 - 무기금수와 문화기술과학교육교류금지 2단계 - 국제금융거래중단
06. 15~ 18	지미 카터 (Jimmy Carter) 전 미 대통령 방북, 김일성 주석 회담 카터 전 대통령 방북결과 서울 기자회견 (6.19): 북, 핵활동 동결 및 핵 투명성 보장 용의, IAEA 사찰관 잔류 허용, 경수로 지원시 구형 원자로 폐기, 미군유해발굴 허용, 남북 정상회담 제의 (김영삼 대통령 정상회담 제의 수락)
07. 08~ 10	3차 북미 고위급회담 (제네바)
07. 08	김일성 사망 (7. 9 공식발표)
08. 05~ 12	3차 북미 고위급 회담 재개 (제네바)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경수로 지원, 폐연료봉 보관, 대체에너지 보장 등 4개항 합의
09. 10~ 14	'북미 실무급 전문가 회의' 개최 (베를린)
09. 23~ 10. 17	3차 북미 고위급회담 두 번째 회의 (제네바)
09. 28	북 인민무력부 대변인, '특별시찰을 통해 군사 대상을 개방하려는 시도는 절대 불가' 주장
10. 21	제네바합의문 (조·미 기본합의문, Agreed Framework between the United State of Americ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 핵연감속로 및 관련 핵시설 동결, 경수로 완공 시 핵시설 해체</li> <li>• 미: 2003년까지 1,000MWe급 경수로 2기 제공, 이전까지 매년 연간 중유50만 톤 공급</li> </ul>

일 시	내 용
11. 01	북, 합의틀(Agreed Framework)에 따른 핵 활동 동결 선언 5MWe 원자로 재장전 계획 취소와 50MWe·200MWe 원자로 건설 중단 발표
11. 07	한, '핵-경협 연계' 대북 경협 축소 완화 방침 표명
11. 28	IAEA 방북 전문가 그룹, 영변 태천 핵동결 사실 확인
12. 11~ 12	폴 사이먼(Paul Simon)·프랭크 머코스키(Frank H. Murkowski) 상원의원 방북, 김영남 부총리 겸 외교부장과 제네바 합의 이행 논의
<b>1995.</b> 01. 06	경수로 공급 계약서에 한국형 명기 거부
01. 15	미, 대북 중유제공 개시
01. 21	미,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 발표 (정보·통신, 금융거래)
02. 24	북 외무성, 평화체제 수립 문제 관련 담화문 발표
03. 09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KEDO: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설립 (1차 집행 이사회 뉴욕서 개최) • 집행이사국: 한국, 미국, 일본, EU • 일반회원국: 핀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칠레,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03. 25~ 27	북-미, 경수로 전문가회담 개최 (베를린), 한국형 거부
05. 19~ 06. 12	북-미, 준고위급 회담 (허바드-김계관, 쿠알라룸푸르)서 경수로 협상 타결(한국형 경수로)
06. 17~ 24	미 기술진 방북, 5MWe 원자로 폐연료봉 8,000여 개 처리 확인
08. 23	북, UN에 수재에 따른 긴급구호 요청
12. 15	KEDO와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1,000MWe급 가압경수로 2기(한국 표준형)

일 시	내 용
1996. 01. 30	IAEA 대변인, 북 주요 핵시설 사찰 거부 언급
02. 22	북, 대미 평화협정 제의
03. 19	KEDO, 주계약자로 한국전력 선정
04. 20~ 21	북·미 1차 미사일 회담 (베를린)
04. 27	폐연료봉 8,000여 개 밀봉작업 개시
05. 01	미 국무부, 북의 핵연료봉 봉인 착수 발표
07. 11	KEDO-북, 3개 의정서에 공식 서명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통신·통행)
09. 10	UN 총회, 포괄적 핵실험금지 조약 (CTBT: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채택
09. 18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발생
09. 20	IAEA, 북의 과거 핵 운용 공개 촉구
10. 15	UN 안보리, 잠수함 침투사건관련 의장성명 채택
10. 29	UN 총회, IAEA 안전조치협정 이행촉구 대북결의 채택
1997. 02. 11	UN, 북에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CTBT) 서명 촉구
06. 11~ 13	북·미, 2차 미사일 협상 (뉴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 미사일 수출, 생산, 개발, 배치 포기 요구</li> <li>•북: 보상받을 시 수출은 고려·생산·개발·배치·포기는 불가</li> </ul>
07. 28	KEDO 금호사무소 개설, 부지공사 착수
07. 28	4자 회담 실무접촉 (뉴욕)
08. 05	4자 회담 1차 예비회담 (뉴욕)
08. 19	신포 금호지구 경수로 부지공사 착공
10. 08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 취임



일 시	내 용
10. 31	미, 5MWe 원자로 폐연료봉 8,000개 밀봉 완료 발표
12. 09~ 10	제1차 4자회담 (제네바)
1998. 03. 16~ 20	제2차 4자회담 (제네바)
08. 17	<뉴욕타임즈> 북 금창리 지하 핵시설 의혹 제기
08. 20	방북 미 하원 관계자에게 미국이 식량 100만 톤과 5억 달러 차관을 제공하면 4자회담 진전, 이란 등에 대한 탄도미사일 판매 중단 제의
08. 21~ 09. 05	북미 고위급 회담 (찰스 카트먼(Charles Kartman) 한반도 평화회담특사, 김계관 외교부부부장) 지하 핵 의혹시설, 핵 연료봉 처리, 미사일회담 재개 등 합의
08. 31	북, 대포동 1호 (광명성 1호) 발사
10. 01~ 02	북·미, 3차 미사일 협상 (뉴욕) • 미: 미사일 시험발사, 수출, 개발/생산/배치 중지 요구 • 북: 3년간 30억 달러 제공시 수출 중지가능
10. 21~ 25	제3차 4자회담 (제네바)
11. 09	KEDO 경수로 비용 분담결의안 서명 • 한-공사비(48억 달러)의 70% • 일-10억 달러 상당의 엔화 • 미-잔여 3억 8천만 달러 조달책임
11. 16~ 18	북미 금창리 지하 핵시설 의혹 관련 1차 협상 (평양)
11. 23	윌리엄 페리 (William James Perry), 대북정책 조정관으로 임명

일 시	내 용
1999. 01. 19~ 22	제4차 4자회담 (제네바)
03. 16	북·미, 금창리 지하시설 사찰 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1999. 5월 중순</li> <li>• 2차: 2000. 5월</li> <li>• 3차: 미국 요청 시 식량 60만 톤 지원, 감자사업 지원</li> </ul>
03. 29~ 30	북·미 4차 미사일 회담 (평양)
05. 18~ 24	미, 금창리 방문단 1차 현장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과 미 국무부 조엘 위트(Joel Wit)외 14명, 핵과 무관한 시설로 판명 (거대한 복합터널)</li> <li>• 미국의 입장: 기본합의문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으나, 추가 원자로 건설 합의문 위반</li> </ul>
05. 25~ 28	윌리엄 페리 미 대북조정관 방북
06. 05	서해교전 (제1연평해전) 발생
09. 02	인민군 무력부, 서해 북방한계선 (NLL: Northern Limit Line) 무효화 선언
09. 07~ 11	북미 고위급 미사일회담 (베를린), 미사일 발사 유보와 경제제재 해제 및 식량 지원 교환
09. 15	페리, 대북정책권고안 (Review of United States Policy Toward North Korea: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Unclassified Report, 페리보고서) 의회보고  대북정책 추진 3단계 (Perry Proc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자제유도와 미국의 대북제재 일부 완화 (단기)</li> <li>• 북한 핵, 미사일 개발중단보장 (중기)</li> <li>• 한반도 냉전 종식 (장기)</li> </ul>

일 시	내 용
	<p><b>정책권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괄적이고 통합된 접근방식의 대북정책 채택</li> <li>• 미 정부의 대북정책 조정을 위한 대사급 고위직 대북조정관 임명</li> <li>• 한·일과의 고위정책 조정감독그룹 존속</li> <li>• 미 의회의 초당적 대북정책 추진</li> <li>• 북한 도발에 의한 긴급상황 가능성 대비</li> </ul>
09. 17	미, 대북 경제제재 완화 조치 발표
09. 24	미사일 시험발사 모라토리엄 (유예) 선언
10. 01	IAEA, 대북 핵안전협정 이행촉구결의안 채택
10. 13	미 상원,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비준안 부결
10. 23	러, 북한행 열차서 방사능 검출, 복려 핵 밀거래 의혹 증폭
10. 28	KEDO, 초음파 유량 측정기로 대북 중유 감시 중유공급지역 (공급비율) : 선봉 (59%), 평양 (15%), 북청 (15%), 청진 (5%), 동평양 (3%), 순천 (2%), 영변 (1%)
12. 15	KEDO-한국전력, 주 계약 공식서명
2000. 01. 22	미·북 베를린회담, 미·북 워싱턴 고위급회담 합의
02. 02	경수로 지연 이유로 제네바 합의서 파기 경고
02. 15	경수로 본 공사 착공
05. 24~ 25	미, 금창리 2차 사찰 (1차 사찰 결과와 상이점 발견 못 함)
05. 29~ 31	김정일, 비공식 방중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과 회담
06. 13~ 15	제1차 남북정상회담 (평양)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일 시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li> <li>•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li> <li>•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li> <li>•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li> </ul>
07. 10~ 12	북·미, 제5차 미사일 회담 (쿠알라룸푸르)
07. 19	북·러 정상회담 (평양), 김정일, 러 위성 대리발사 시 미사일 계획 재고 용의
07. 27	북미 외무장관 회담 (백남순, 매들린 올브라이트 (Madeleine Korbelt Albright))
10. 06	국제테러리즘에 관한 북미공동성명 (Joint U.S.-DPRK Statement on International Terroris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측은 국제 테러가 용납될 수 없으며, 생화학 또는 핵 장치 및 물질이 개입된 테러행위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은 배격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li> <li>•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북한의 반대 입장을 고려, 미국 측은 북한이 미 법률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로 북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키 위해 북한 측과 협력하는 데 동의</li> </ul>
10. 09~ 12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명록 차수, 김 위원장 특사로 방미
10. 12	북미 공동 코뮤니케 (US-DPRK Joint Communiqué) 신뢰회복, 경제협력 및 인도주의 협조 약속 (미군유해발굴, 식량 및 의약품 지원)

일 시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모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li> <li>•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접근이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유익</li> </ul>
10. 23~ 25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방북
11. 01~ 03	제6차 북·미 전문가 미사일 회담 (쿠알라룸푸르)
12. 27	우즈베키스탄, KEDO 가입
2001. 01. 15~ 20	김정일 비공식 방중
01. 21	조지 부시 (George Walker Bush) 제43대 미국 대통령 취임
02. 01	핀란드, KEDO 탈퇴
02. 21	북 외무성 대변인,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핵·미사일 합의 파기 경고
03. 03	북 외무성 대변인, 제네바 합의 이행관련 미국에 전력손실 대안 요구
03. 22~ 23	KEDO 집행이사회 개최 (뉴욕), 노무인력 및 터빈·발전기 문제논의
05. 01	KEDO-북 고위 전문가 회의 개최 (향산)
05. 14	유럽연합 (EU), 북과 수교 결정
05. 16	북은 경수로 건설 지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흑연감속로 재가동 경고
06. 06	부시 미 대통령, '북한과의 대화 재개' 공식 선언 핵, 미사일, 재래식 무기에 대해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협상할 의지 표명 ('포괄적 해결' 제안)

일 시	내 용
08. 04~ 05	<p>북·러 정상회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모스크바 선언' 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국제 분쟁들은 대결이 아닌, 평화적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 합의</li> <li>• 북한 측은 자국의 미사일 계획이 평화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북한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어떠한 나리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li> </ul>
09. 04	<p>북·중 정상회담 (평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 하나의 중국정책 지지</li> <li>• 중,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의 노력 지지</li> </ul>
09. 11	미, 9.11 테러 발생
09. 25	IAEA, 핵안전협정 준수 촉구 대북결의안 채택
10. 16	부시, 북 대량살상무기 확산 중단해야 국제적 신뢰받을 것, 미 전쟁 상황 악용은 오판 언급
11. 12	북, 2개의 반테러협약 서명
11. 26	부시 미 대통령,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사찰 투명하게 받아야"
12. 14	UN 총회서 대북 핵사찰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2002. 01. 29	부시, 연두교서에서 '악의 축 (Axis of Evil)' 발언
02. 01	북, "부시의 발언은 사실상 선전포고" 성명
02. 20	<p>한·미 정상회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시 미 대통령, "미국은 전쟁을 일으킬 의사가 없고, 또 한국도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li> <li>• 김대중 대통령, 굳건한 한미동맹과 테러 근절 문제 계속 협력, 북한의 WMD와 미사일 문제 해결 및 대화를 통한 해결에 부시 대통령과 의견 일치</li> </ul>
03. 09	미 국방부 '핵 태세 검토보고서 (NPR: Nuclear Posture Review)'에서 핵 선제사용 가능 대상 7개국(중국, 러시아, 이라크, 이란, 북한, 리비아, 시리아)에 북한을 포함하여 파장

일 시	내 용
03. 13	북, NPR에 반발 미국과 모든 합의 재검토 주장
03. 20	미, 북의 제네바 기본 합의 이행에 대한 인증 유보
04. 03	북, 중단 되었던 KEDO와의 협상재개 용의 표명
04. 03~ 06	임동원 대북특사 방북
04. 11	북, 북미 회담 재개 희망
04. 30	북-미, 대화 재개에 합의
04. 30~ 05. 04	KEDO-북, 고위전문가회의 개최 (직항공로 개설 협의)
05. 21	미 국무부, 북 테러 지원국 지정
06. 29	서해교전 발발, 제임스 켈리 (James A. Kelly)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방북 계획 철회
07. 01	7.1 경제관리개선조치
07. 31	아세아지역안보포럼 (ARF: ASEAN Regional Forum) 북미 외무장관 비공식회담 (백남순-파월(Colin L. Powell))
08. 13	북, 미국의 핵사찰 수용 요구 거부
08. 29	존 볼튼(John R. Bolton) 미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차관, 북의 제네바 합의 이행 및 IAEA 사찰 수용을 재촉구
09. 16	럼스펠드(Donald H. Rumsfeld) 미 국방장관, '북 이미 핵무기 보유' 주장
09. 17	북·일 정상회담 (평양), 일본인 납치시인 및 평양선언
10. 03~ 05	켈리 차관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해 강석주 북 외무성 제1부상과 회담
10. 16	켈리 특사, '북 고농축우라늄 (HEU: Highly-Enriched Uranium)을 이용한 비밀 핵개발 계획의 추진 시인' 발표
10. 21	부시, "북핵 문제를 우방국과 협력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

일 시	내 용
10. 22	미·러, 북핵 평화적 해결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핵문제 신속하고 평화적 해결</li> <li>• 미, 북핵은 일본 겨냥한 것</li> <li>• 일, 핵개발 지속시 수교 교섭 및 KEDO 일시중지</li> </ul>
10. 25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 미국의 '선 핵개발 계획 포기' 거부, 불가침조약 체결 제의
10. 27	APEC 개최 기간 중 한미일 정상, 북의 핵 폐기 및 국제적 의무 준수 촉구
10. 29	미 국방 및 국무장관, 대북 지원을 통한 북핵해결방식 배제 표명
11. 13	미 국가안보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11월분 대북중유는 예정대로 지원하되 12월분부터 중유지원을 중단 발표
11. 15	KEDO 집행이사회, '가시적이고 검증 가능한(visible and verifiable)' 방법으로 HEU등을 이용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경수로 건설 등 다른 KEDO 사업도 재검토 (뉴욕 현지 14일)
11. 15	부시 미 대통령, 대북 성명 발표 (핵 폐기 촉구, 북 침공 않겠다)
11. 21	미 CIA 보고서 공개, '북은 이미 1-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어서, 2003년까지 7-8개의 핵무기 보유도 가능하다'고 추정
11. 28	IAEA 이사회, 북의 핵 개발 포기 요구 성명 채택 (오스트리아 빈)
12. 12	북, 핵 활동 동결 해제 선언
12. 13	IAEA에 핵 동결 시설 봉인·감시 카메라 제거 요구
12. 22	핵 동결 해제 조치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MWe 원자로, 핵연료 제조 공장, 영변 8000여 개의 사용 후 핵연료봉 저장시설 등에서 봉인·감시 카메라 제거한, 봉인 해제 원상 복구 촉구</li> <li>• IAEA, 북한을 최우선 감시 대상국 지정</li> </ul>



일 시	내 용
12. 23	<p>방사화학실험실 (재처리시설) 감시 장치 제거</p> <p>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당선자 북핵 대책 논의</p> <p>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 “이라크와 북한에서 전쟁을 동시에 수행 가능하다”고 경고</p>
12. 24	<p>핵시설 봉인 제거 완료해 감시 체제 무력화</p>
12. 26	<p>IAEA, “북한이 1000개의 핵 연료봉을 장전했다”</p>
12. 27	<p>IAEA 사찰단원 3명 추방 통보</p> <p>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북에 핵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북핵 성명 발표</p>
12. 29	<p>미, 대북 ‘맞춤형 봉쇄’ 정책 돌입 (정치·경제 제재)</p>
12. 29	<p>북, NPT 탈퇴 가능성 시사</p>
12. 31	<p>IAEA 북핵 감시 사찰단 2명 북 추방 통보에 따라 철수</p>
12. 31	<p>부시, 북핵 외교적 방법으로 평화적 해결 천명</p>
2003. 01. 06~07	<p>한·미·일 대북정책조정그룹 (TCOG: Trilateral Co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 회의, 북한 핵무기 개발계획 폐기 촉구 공동성명 발표</p>
01. 06	<p>IAEA 특별이사회, HEU 핵개발계획에 대한 해명 및 핵 동결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p>
01. 10	<p>NPT 탈퇴 선언</p> <p>제2차 북핵위기 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소집, “북한의 NPT 탈퇴 철회해야”</li> <li>• 미·중, 조지 부시 대통령·장쩌민 중국 국가주석, 긴급 전화 통화 “심각한 우려”</li> </ul>

일 시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러, 정상회담서 “북한 NPT 탈퇴 철회 촉구” 공동성명</li> <li>• 북·미, 한성렬 주UN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빌 리처드슨(Bill Richardson) 뉴멕시코주 주지사 비공식 접촉 (1. 11)</li> </ul>
01. 11	최진수 주중 북 대사, “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하겠다”
01. 12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북핵 특사 자격으로 방한
01. 13	노무현 당선자, 제임스 켈리 면담  북핵 불인정·평화적 해결·한국 주도의 3원칙 제시
01. 14	부시 미 대통령, 핵 포기하면 북에 경제 지원 표명  파월 미 국무장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 중 기존의 협상과는 다른 ‘새로운 합의(New Arrangement)’도 가능 언급  북, 기만적 대화 유포 중단 촉구
01. 27~ 29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  김영남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북핵 논의, 김대중 대통령 친서 전달  어떠한 핵무기 개발 시도도 반대한다는 입장 전달, 핵무기 개발 포기 및 핵 동결 원상복귀 선언 요구
01. 28	부시 미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북한 등 3개 국가는 무법 정권 (Outlaw Regime)”, “북한의 핵 위협에 굴복 않겠다” 언급
02. 04	미 워싱턴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북한 핵 청문회’ (리처드 아미티지(Richard Armitage) 국무부 부장관 북핵 증언)
02. 05	북 외무성, 동결되었던 핵 시설들 가동 재개 및 운영 정상화 공표
02. 06	파월 미 국무장관, 대북 침공의사는 없지만, 어떠한 군사적 선택도 배제되지는 않고 있다고 경고

일 시	내 용
02. 07	부시, 북에 군사적 행동도 고려 (동시에 평화 해결 노력 지속)
02. 07	한-미, 북핵 전담기구 신설 (워싱턴)
02. 12	IAEA 특별이사회, UN 안보리에 북핵 문제 공식 회부 결의 러시아·쿠바: 기권 / 중국: 찬성
02. 25	노무현 대통령 취임,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할 것인지, 체제안전과 경제지원을 약속받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북, 지대함 미사일 발사 (함경남도)
02. 26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북 영변 원자로 재가동 발표
02. 28	<뉴욕타임스> 미 국방부 관리 인용 “외과수술적 미사일 공격부터 집중폭격, 심지어 전술 핵무기를 쓰는 방안까지 모두 검토”
03. 02	북 미그기 4대, 미 정찰기(RC-135)에 15m 접근 위협 미: 도발 간주, 공식 항의
03. 03	부시 미 대통령, 외교적 노력으로 북핵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마지막 선택은 군사행동이라 언급
03. 08	한, 종합주가지수·원화가치 급락,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가산금리 급등
03. 10	동해상에서 지대함 미사일 2차 시험 발사
03. 20	이라크 전쟁 발발
03. 25	중 외교부 대변인, UN 제재에는 찬성할 수 없으며, 중국 주재 하 북미 당사국 회담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피력
04. 12	북 외무성 대변인, “대화의 형식에 크게 구애되지 않을 것” (다자회담 수용 시사)
04. 13	부시 미 대통령, 북의 다자 간 대화 수용에 “북한에서 좋은 진전”

일 시	내 용
04. 18	북 외무성 대변인, “8천여 대의 폐연료봉들에 대한 재처리 작업까지 마지막 단계에서 성과적으로 진행”, “핵문제의 해결과 관련한 본질적인 문제들은 조-미 쌍방 사이에 논의”
04. 23~ 25	북-미-중, 북핵 3자회담 개최 (베이징)
04. 30	미, 북을 테러지원국 재지정 북한,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수단, 시리아 이상 7개국
05. 05	<뉴욕타임스> 미 대북 정책의 초점이 핵무기 생산 금지에서 ‘수출 금지’로 전환 중이라 보도 미 국무부 리처드 바우처 대변인은 이를 부인
05. 12	<중앙통신사 상보(詳報)> 미국이 “북남비핵화 공동선언을 무력화”
05. 15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 공동성명에서 “북핵은 다자 틀 속에서 평화적으로 제거,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에는 ‘추가적 조치(further steps)’ 검토”
05. 23	미일 정상회담, “북핵 위기 고조 때는 강경조치, 북핵 회담에 한·일 참여”
05. 24	북 외무성 담화, “먼저 북·미 간 회담을 계속해 미국이 제기하는 다자회담도 할 수 있다”
05. 27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북의 양자회담 제의 거부
05. 31	부시 미 대통령,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추진 선언
06. 04	볼튼 미 국무부 차관, “북이 완전하며, 검증가능하며, 반복 불가능한 방식(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armament)으로 핵무기 개발을 종료할 경우 북측의 담대한 제안에 대한 논의가능성도 재검토할 수 있을 것”

일 시	내 용
06. 12~ 13	한·미·일 대북정책그룹 (TCOG) 회의 (하와이)
06. 17	미, 대북 식량 지원 유보
06. 18	북 외무성 대변인,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더욱 박차”
06. 30	북, 재처리 플루토늄의 무기화 언급
07. 03	UN 안보리 ‘북핵 폐기 촉구’ 의장 성명,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무산
07. 12~ 15	다이빙궤(戴秉國) 중 외교부 부부장 방북 (다자 회담 설득, 북 수용 불가)
07. 14	KEDO 이사국 실무자 회의 (뉴욕)
07. 21	미 의회, KEDO 지원 금지법 통과
07. 23~ 25	북, 다자회담 수용 의사를 한·미·일·중·러 통보
07. 28	존 볼튼 미 국무부 차관, 북핵문제 협의 위해 방중(29일 방한)
08. 04	북 외무성, 6자회담 개최 발표 (6자회담 틀내 조미 쌍무회담 제안)
08. 07	왕이(王毅) 중 외교부 제1 부부장 방북, 6자회담 일정 합의
08. 12	한·북·러, 6자회담 관련 고위급 회담 (모스크바)
08. 13~ 14	6자회담 관련 한·미·일 3자 협의 (워싱턴)
08. 27~ 29	제 1차 6자회담 개최 (베이징)
08. 29	미 국무부, 북핵의 CVID식 해결 촉구
09. 01	왕이 중 외교부 부부장,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의 최대 걸림돌”
09. 05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북한 핵 폐기 의지 보일 땐 안전 보장 방안을 검토하겠다”

일 시	내 용
09. 15~ 19	제47차IAEA 총회(오스트리아 빈)서 한국을 2년 임기의 이사국으로 선출
09. 30	한·미·일 북핵 관련 비공식 회의(도쿄)
10. 02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 플루토늄을 핵 억제력 강화 방향에서 용도를 변경"
10. 29~ 31	우방궤(吳邦國) 중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 6자회담 재개 동의
11. 03~ 04	KEDO 집행이사국 비공식 집행이사회(뉴욕), "경수로 공사 1년 정도 중단"
11. 09	다이빙귀 중 외교부 상무 부부장 방한
11. 19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 2차 6자회담 협의차 방한
11. 21	KEDO, 경수로 한시 공사 중단 공식 발표 (뉴욕)
12. 09	원자바오(溫家寶) 중 총리-조지 부시 미 대통령 정상회담 부시, 북의 핵 동결·대북 지원 행동 조치 제안 거부
12. 09	북 외무성 대변인, 2차 6자회담 기본입장 발표 미 '서면 안전담보' 수용 불가, 북의 일괄타결안 동시행동 원칙 제의
12. 19	리비아,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완전폐기 선언
12. 24	미, 북에 식량 6만 톤 추가 지원
2004. 01. 06~ 09	미국 민간 대표단(해커, 프리처드 등), 북 영변 핵시설 견학
01. 17~ 20	왕자루이(王家瑞) 중 대외연락부장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 "차기 6자회담 개최 동의, 미국의 입장확인 필요"
01. 21	한·미·일 3자 정책 협의회, 2차 6자회담 전략 조율

일 시	내 용
01. 23	북미 뉴욕접촉, 2월초 6자회담 개최, 회담 시 미·북 직접협상 참가योग의
02. 02	파키스탄 압둘 카디르 칸 (Abdul Qadeer Khan), “80~90년대 북한에 핵무기 제조기술 유출” 밝힘
02. 24	제 2차 6자회담 남북 수석대표 회담 (베이징)
02. 25~ 28	제 2차 6자회담 (베이징) 의장성명서 채택 (28일),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의지 표명
04. 07~ 08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북핵 정책 협의회(샌프란시스코) CVID원칙 재확인
04. 15	제60차 UN 인권위원회의의 북 인권 결의안 통과
04. 19~ 21	김정일, 극비 방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진타오(胡锦涛)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 (핵개발 포기·보상, 신의주 특구 등 협의, 19일)</li> <li>• 장쩌민 주석, 우방귀 전인대 상무위원장 연쇄 회담 (6자 회담 계속 참여, 20일)</li> </ul>
05. 12~ 15	제3차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 (베이징)
05. 20	KEDO 집행이사회 개최 (뉴욕)
05. 22	북일 2차 정상회담, 고이즈미 준이치로 (小泉純一郎) 일 총리 재방북
06. 21~ 22	제3차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 (베이징)
06. 23~ 26	제3차 6자회담 (베이징)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인 과정에 대한 필요성 강조
07. 02	미·북 외무장관회담(ARF참석, 자카르타)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백남순 북 외무상

일 시	내 용
07. 09	콘돌리자 라이스 (Condoleezza Rice) 미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 대통령 특사 자격 방한해 “북 핵 폐기 시 놀랄 만한 대가 있을 것” (리비아식 제안)
07. 24	북 외무성 대변인, “리비아식은 선(先) 핵포기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08. 07~ 08	북, 미일 PSI 합동해상 훈련 맹비난
09. 11	북 외무성 대변인, 한국 핵물질 실험 문제 관련 6자회담 연계 시사
09. 18	통일부,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무기 개발·보유 의사 없음</li> <li>● 핵 투명성 유지와 국제 협력 강화</li> <li>● 핵 비확산에 관한 국제 규범 준수</li> <li>● 핵의 평화적 이용 범위 확대</li> </ul>
09. 27	최수현 북 외무성 부상, UN 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8,000개의 폐연료봉 재처리해 무기화” 주장
09. 30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리자오싱 (李肇星) 중 외교부장, 북핵 6자회담 조속한 개최 합의 (워싱턴)
10. 22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 북 외무성 대변인, 북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그리고 동시행동의 원칙에 의거한 일괄타결 방안의 첫 단계로서 ‘동결 대 보상’의 시행이 전제된다는 조건 하에 6자 회담에 참가할 용의가 있다고 발언
11. 26	KEDO, 집행이사회 개최해 북 경수로 건설 중단 1년 연장 결정 (뉴욕)
2005. 01. 08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민주당 간사 톰 란토스 (Thomas Peter Lantos) 하원의원 일행 방북
01. 11~ 14	미 의회 하원의원 대표단 방북 쿠트 웰던 (Curt Weldon) 등 공화·민주당 의원 6명, 6자회담 재개 시사



일 시	내 용
01. 18~ 19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지명자, 청문회서 “북한은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 of Tyranny)” 발언
01. 20	부시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자유 확산과 폭정의 종식 강조
02. 10	<p>북, ‘핵무기 보유’ 선언 (외무성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자회담 참가 무기한 중단</li> <li>◆ “핵무기고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취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북한의 핵 능력 강화 언급은 문제 해결에 도움 안 돼”반기문 외교 통상부 장관 미국에 급파, 딕 체니(Dick Cheney) 미부통령과 협의</li> <li>• 미: “북한 고립 심화될 뿐”</li> <li>• 북: 주UN 북한대표부 한성렬 차석대사, “북·미 직접 대화해야”</li> <li>• 중: “북핵 관련 대북한 압력·제재 반대 입장”</li> <li>• 일: “새로운 것 아니다”</li> <li>• 미·중: 콘돌리자 라이스 미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리자 오싱 중국 외교부장 전화 통화로 북핵 의견 교환 (12일)</li> <li>• 한·중: 반 장관-라이스 미 국무장관, 북핵 3대 정책 합의(14일), 북 회담 복귀 압박, 대북 추가 보상 금지, 북 핵물질 반출 경계</li> </ul>
02. 19	<p>왕자루이 중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방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정일, “6자회담 조건 되면 회담 탁(卓)에 나갈 것”</li> </ul> <p>미일 외교·국방장관 ‘2+2회담’ 공동 기자 회견서 “북핵 해결 안되면 UN 안보리에 상정”</p>
03. 02~ 04	우다웨이(武大偉) 중 외교부 부부장 방한
03. 18~ 21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동북아 순방, 북을 ‘주권국가’로 지칭, 방일 (3. 18~19), 방한 (3. 19~20), 방중 (3. 20~21)
03. 31	북 외무성, “북한이 이미 핵 보유국이 된 이상 6자회담은 이제 군축회담이 되어야 한다” 고 주장
04. 23~ 29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R. Hill) 미 국무부 아태차관보 한중일 방문 북핵 문제 협의

일 시	내 용
04. 25	북 외무부, UN 제재를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 엄포
04. 29	부시, 김정일에 폭군 (tyrant) 지칭 북, “부시는 불망나니에 도덕적 미숙아” (30일)
05. 06	한-일, 한-중 연쇄 북핵 회담, “6자회담 외교노력 계속”
05. 08	한-중 정상회담 “북한 핵에 깊은 우려”
05. 09	한-러 정상회담 “6자회담 위해 더 노력”
05. 09	미-러 정상회담, “북핵 6자회담에서 해결”
05. 11	북 외무성, “영변 원자력 발전소에서 폐연료봉 8,000개 인출 작업 완료”
05. 13	북-미, 뉴욕 실무접촉, 북미 직접대화 가능성 시사
06. 10	한-미 정상회담 “한반도에서 핵무기 완전 제거가 공동 목표”
06. 17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미: “날짜 정하기 전까지 6자회담은 없는 셈” 정 장관: 200만KW 전력공급 제의 (7. 12 발표) 김 위원장: “미국에서 북한 인정·존중 확고할 경우 내달 6자회담 복귀 용의”,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유효”
06. 18	북, 영변 5MWe 원자로 재가동
06. 29	부시 미 대통령, “대량살상무기 (WMD) 확산 혐의로 북한 기업의 미국 내 활동·자산 동결” 북 3개 회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연봉총회사) 미국 내 자산 동결
07. 09	김계관-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접촉 (베이징), “7월 25일경 제 4차 6자회담 개최 미국과 합의” 발표

일 시	내 용
07. 12	정동영 통일부 장관, 대북 중대 제안 발표 “북한 핵 폐기할 때는 2008년부터 200만KW 전력 직접 공급”, “핵 폐기 2년 내 이뤄져야” (14일)
07. 09~ 13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한·중·일 순방 중 (9~10일), 일 (11~12일), 한 (12~13일) 방한 중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 회담, “전력 지원, 6자회담에 큰 도움”
07. 13	김정일 위원장, 특사로 방북한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 면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북한이 노력할 것”
07. 14	한·미·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4차 6자회담 실무 협의(서울), ‘대북한 송전’ 6자회담서 추진
07. 26~ 08. 07	제4차 6자회담 1단계 회의 개최 (베이징)
08. 11	정동영 장관, “평화적 핵 이용은 북한의 권리”
08. 13	페르베즈 무샤라프(Pervez Musharraf) 파키스탄 대통령, 파키스탄 핵무기 개발의 대부인 압둘 칸 박사가 1990년대 초 북에 원심분리기 본체와 관련 부품 및 설계도 보낸 사실 공개
08. 13~ 15	테드 터너(Ted Turner) CNN 사장 방북
08. 14~ 18	폴리코프스키(Konstantin Pulikovskiy) 러 극동대표부 대표 방북
08. 15~ 18	칼 레빈(Carl Levin) 미 상원의원(민주당) 일행 방북
08. 25~ 26	추이텐카이(崔天凱) 중 외교부 부부장 방한
08. 23	반기문 장관·라이스 국무장관, 한·미 외교장관 회담 통해 북 핵무기 완전 폐기 원칙 재확인

일 시	내 용
08. 29	북 외무성, 9월 셋째 주에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갖자 발표
08. 30~ 09. 03	란토스(Tom Lantos, 민주당)·리치(Jim Leach, 공화당) 미 하원의원 방북, 북의 6자회담 조속 복귀 촉구
09. 13~ 19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개최 (베이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 "핵 프로그램 폐기"</li> <li>•북: "핵 무기만 포기"</li> </ul>
09. 13	부시 미 대통령·후진타오 중 국가주석, UN 총회 참석차 정상회담 (뉴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 "6자회담 통해 외교적 해결"</li> <li>•중: "북한 핵무기 포기 계속 설득"</li> </ul>
09. 15	미 재무부,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Banco Delta Asia) 통해 위조 달러 지폐를 유통시키고 불법 국제거래 대금을 세탁해왔다"고 공식 발표
09. 19	<p>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9·19공동성명 (Joint Statement of the Four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채택</p> <p>&lt;9·19공동성명 요약&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 포기</li> <li>- NPT·IAEA 안전조치 복귀, 경수로 제공문제 논의</li> <li>-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li> </ul> <p>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2005.9.19, 베이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 (NPT)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li> </ul>

일 시	내 용
	<p>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또는 배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은 준수, 이행되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동의하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자는 상호 관계에 있어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관계에서 인정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했던 과거와 현안사항의 해결을 기초로 하여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li> <li>• 6자는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에 양자 및 다자적으로 증진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연방 및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의의를 표명하였다.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2백만 킬로와트의 전력공급에 관한 2005.7.12차 제안을 재확인하였다.</li> <li>•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li> <li>• 6자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상기 합의의 이행을 위해 상호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하였다.</li> <li>• 6자는 제5차 6자회담을 11월초 북경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일자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li> </ul>
09. 20	미,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을 ‘우선적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목 (BDA는 북과 거래 중단 발표)
09. 30	한, “북한, 핵 상호 사찰 요구 땀 수용” 밝힘
10. 06	힐 차관보, 미 하원 외교위원회 북핵 청문회에서 “북한에 경수로 관련 어떤 약속도 없었다” 고 발표

일 시	내 용
10. 18	북 외무성 대변인, “미국의 대조선 제재 실시를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며, 미국이 적대행위에 계속 매달린다면 자위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10. 21	미국, 해상무역·조선광성무역·조선부강무역 등 북 8개 기업 대량살상무기 확산 개입 의혹으로 자산 동결
11. 09~ 11	제5차 6자회담 1단계 회의 (베이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 미국의 마카오 은행에 대한 대북거래 금지 조치 반발 (10일)</li> <li>● 9·19 공동성명을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으로 이행하는 내용의 의장 성명 채택</li> <li>● 북-미, ‘금융 제재’ 양자 협의 갖기로 합의</li> </ul>
11. 18	UN 총회, 대북 인권 결의안 채택
11. 21~ 22	KEDO 집행이사회 사업 종료방안 논의 (뉴욕)
12. 07	알렉산더 버시바우(Alexander Vershbow) 주한 미대사, 북을 ‘범죄국가’로 지칭
12. 20	<중앙방송> “경수로 제공의 중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 우리(北)는 흑연감속로들과 그 연관시설들에 기초한 핵 동력 공업을 적극 발전시킬 것”
12. 21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 “북한의 달러 위조는 분명한 사실” (현지 20일)
12. 29	한, NSC 개최, 미국요청 PSI 관련 요청 8개 사항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내외 차단 훈련에 참관단 파견</li> <li>● PSI에 관한 포괄적 구체적 브리핑 청취</li> <li>● 한미 군사훈련에 WMD 거래 차단 훈련 포함 등의 항목에 시안별로 협조할 것 결정</li> </ul>
12. 31	<평양방송> “미국이야말로 세계 최대의 범죄국가”

일 시	내 용
2006. 01. 05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북한 위조지폐 대응은 조지 부시 대통령의 뜻”
01. 08	KEDO 현장 인력 전원 철수
01. 10~ 18	김정일 국방위원장, 비공식 방중
01. 18	북·미·중 6자회담 수석대표 베이징에서 회동  북: 선 금융 제재 해제 요구 / 미: 기존 입장 고수
02. 02	존 네그로폰테(John Negroponte) 미 CIA 국장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은 핵보유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인 듯(probably true)하다”고 증언
02. 04	북·일 국교정상화회담 (베이징)
02. 16	방코델타아시아은행, 대북거래 중단 선언
02. 28	백남순 북 외무상,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한 6자 회담 재개는 불가능 주장
03. 07	북·미, 위폐 및 불법금융 거래 문제 논의를 위한 실무접촉 (베이징) • 북: 위폐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교류와 합동협약기구 설치 제안 • 미: “불법행위는 협상대상이 아니다” 거부
03. 20	미, 코하스 AG (Kohas AG) 미국 내 자산 동결(북 대량살상무기 지원 혐의)
05. 31	KEDO, 경수로 사업 공식 종료 대외 발표문 “제네바 합의 파기는 북한 책임” 신포에 건설 중인 경수로 사업 종결, 10년 6개월간 15억 6200만 달러 투입
06. 01	북 외무성, 힐 차관보 초청 (미국 거부, 2일)

일 시	내 용
06. 18	아소 다로 (麻生太郎) 일 외상,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토에 떨어지면 공격으로 간주해 필요한 조치 취할 것”
06. 19	라이스 미 국무장관, 대북 미사일 모라토리움 준수 촉구
06. 22	딕 체니 미 부통령, “북한 미사일 외교적 해결”
06. 26~ 27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북 미사일 문제 협의 위해 방중  리자오싱 중 외교부장, “북한 미사일 발사 중지, 중국의 관심 북한에 전달”
06. 29	짐 리치(Jim Risch)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 북한 청문회에서 북이 최대 13개의 핵무기 제조를 가능케 하는 양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 총리-조지 부시 미 대통령 정상회담, 북 위협 공동 대응
07. 05	미사일 발사 실험 (미 독립기념일, 현지 4일) 새벽 6발 발사, 12시간 후 1발 추가 발사/대포동 2호 7분간 비행 후 공중폭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 “자위적 국방력 강화차원의 군사훈련으로 6자회담과는 무관”</li> <li>● 한: “대북 강경론 입지 강화, 남북간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 미칠 것”</li> <li>● 미: “UN 안보리 긴급 소집”</li> <li>● 일: “도발 행위, 평양 선언 위배”, 북 화물선 (만경봉92호) 입항 금지</li> </ul>
07. 06	노무현 대통령,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미사일 외교적 해결” 전화 통화  북 외무성 대변인, “군대가 정상적으로 진행한 군사훈련의 일환”, “이에 대해 시비질하고 압력을 가하려 든다면 우리(北)는 다른 형태의 보다 강경한 물리적 행동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
07. 07	힐 차관보, 한·중·일·러 4개국 긴급 순방  한성렬 주UN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미국이 마카오 자금동결을 풀면 6자회담에 복귀할 것”



일 시	내 용
07. 10	우다웨이 중 외교부 부부장 방북
07. 11~ 13	힐 차관보 방중
07. 15	UN 안보리, 안보리 결의 제1695호 (Resolution 1695) 만장일치 채택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에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중지하고 발사유예 선언 등 기존의 약속을 준수할 것을 요구</li> <li>• 모든 회원국에 미사일과 관련 물품, 재료, 기술이 북의 WMD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못하게 할 것 요구</li> <li>• 이와 관련 북에 각종 재정 자원을 북에 제공하지 말 것 요구</li> <li>• 북의 전제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 및 핵개발 프로그램 포기 결정</li> </ul>
07. 17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힐 차관보 회동(워싱턴), 5자회담 개최 추진 합의
07. 19	미사일 발사 후 한국의 쌀·비료지원 중단에 대해 이산가족 상봉, 8·15 화상 상봉, 금강산 면회소 건설 등 모든 남북 사업 중단 선언
07. 21	노무현 대통령-후진타오 중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 미국 주도의 대북 압박 정책 참여 안 해
07. 25	미 상원, '북한 비확산법안 (North Korea Nonproliferation Act of 2006)' 통과 (9. 30 하원 통과) 미사일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제조 및 보유 관련 물품, 서비스 및 기술 등을 북에 이전하거나 북으로부터 구입한 업체 및 개인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권을 미 대통령에 부여
07. 28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계기로 6자회담 참가 5개국(한·미·중·러·일)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참여한 '10차 외교장관 회동' 개최
08. 01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북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 담은 의장성명 채택
08. 12	힐 차관보, 북 핵실험 가능성 언급

일 시	내 용
08. 17	ABC 방송, 북 장비 이동으로 지하 핵실험 의심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아직까지 확인된 정보 없어</li> <li>• 미: 북이 핵실험 한다면 주변 국가에 위협을 일깨워 주는 것</li> </ul>
08. 21	부시 대통령-후진타오 국가주석, 전화로 북 핵실험 중단 촉구
08. 26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 “부시 행정부가 금융제재 확대를 통한 압력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자기의 사상과 제도,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대응조치들을 다 강구해 나갈 것”
09. 09	세계 24개 금융 기관 대북거래 중단 (중국 포함)
09. 13	미, UN 전 회원국에 초강경 대북 제재 조치 동참 공문
09. 14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 6자회담 재개 및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공동의 포괄적인 접근방안’ 합의
09. 17	김영남 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비동맹운동 (NAM: Non-Aligned Movement) 정상 회의에서 “미국이 대북한 제재를 계속하는 한 6자회담 복귀 없다”
09. 21	버시바우 대사,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나타낼 경우 힐 차관보의 평양 방문 고려”
09. 25	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 자서전에서 “칸 박사가 원심분리기 20여 기 북한에 제공”
09. 26	라이스 장관, “북한 6자회담 복귀 마지막 노력의 일환으로 내달 아시아 순방”  최수현 북 외무성 부상, UN 총회 연설에서 “미국의 제재 해제 없이는 6자회담 복귀 불가”
09. 29	천영우-우다웨이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북핵 ‘포괄적 접근 방안’ 협의 (서울)

일 시	내 용
10. 03	<p><b>북 외무성, 핵실험 계획 발표</b></p> <p>“미국 제재 압력에 자위적 차원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 연구 부문에서는 앞으로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핵실험을 하게 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여·야, 핵실험 중단 촉구</li> <li>• 일: 북 핵 실험 용서 못해</li> <li>• 미: 북 핵실험 하더라도 핵보유국으로 인정 않을 것</li> </ul>
10. 06	<p><b>UN 안보리의장 성명서 채택, 북 핵실험 계획 발표에 강력 경고 및 철회 촉구</b></p>
10. 08	<p><b>중·일 정상회담 (베이징)</b></p> <p>6자 회담 재개 추진, 대화와 협의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 실현,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 다짐</p>
10. 09	<p><b>1차 지하 핵실험(풍계리)</b></p> <p>미 국가정보국장(US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지하 핵실험 공식 확인, 채집조사(environmental sampling)에서 방사능 물질 누출 확인</p> <p>&lt;조선중앙통신&gt;</p> <p>“과학연구부문에서는 지하핵실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p> <p>오전 10시 35분 북한 함경북도 화대군에서 진도 3.58에서 3.7의 지진파 포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핵실험은 불장난, 포용정책 주장하기 어렵다” (노무현 대통령)</li> <li>• 미: 미국은 절제되고 침착한 태도로 대응, 국제사회의 평화의 파트너들과 협의하되, 특히 한국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 미국은 UN의 협조가 중요하고 현재 UN에서의 논의를 지지 (부시 대통령)</li> <li>• 중: 북이 제멋대로 핵실험</li> </ul>
10. 09	<p><b>한·일 정상회담 (서울), 북핵 실험에 공동 대응</b></p>
10. 10	<p><b>노무현 대통령, 전직 대통령(전두환, 김영삼, 김대중)과 북핵 실험 관련 오찬 간담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대중: 햇볕 정책은 성과, 북·미 간 대화가 해법</li> <li>• 김영삼: 햇볕 정책 폐기</li> </ul> <p>버시바우 대사, “현 상황에서 모든 정부는 북한 정권에 혜택을 주는 모든 지원 프로그램 재검토해야”</p>

일 시	내 용
10. 11	<p>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 “미국이 우리(북)를 계속 못살게 굴면서 압력을 가중시킨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연이어 물리적인 대응조치들을 취해 나가게 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시 대통령: 우방·미국 지키기 위해 모든 방법 강구할 것</li> <li>• 노무현 대통령: 내 임기 중 북핵 문제 해결 어렵고, 북·미 대화도 당장은 힘든 상황</li> <li>• 일본 정부: 북 선박 입항 금지, 전 품목 수입 금지, 북한 국적자의 원칙적인 입금 금지 등 독자적인 경제 재재 결정 (13일)</li> </ul>
10. 11~ 19	<p>중 외교부 탕자쉬안(唐家璇)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후진타오 국가 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방미(11~12)· 러(13~15)· 북(18~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시 대통령과 라이스 장관 만나 북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 의견 차이 조율(13일)</li> <li>• 김정일, ‘금융제재 해결 보장 시 6자회담 복귀’ (19일)</li> </ul>
10. 13	<p>한·중 정상회담</p> <p>노무현 대통령, 중국 실무 방문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 3개항 요구조건 제시</p> <p>부시 미 대통령, ‘북한 비확산법안 (North Korea Nonproliferation Act of 2006)’ 서명(WMD 관련 물자나 기술 거래 제재 가능)</p>
10. 14	<p>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UN 사무총장 선출</p> <p>UN 안보리, 안보리 결의 제1718호 (Resolution 1718) 만장일치 채택 비군사적 제재만 허용하는 7장 41조를 적용 (최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내용: 핵무기·미사일 관련 물자 제품 교역 금지, 북한 자산동결 및 금융 중단, 무기 제조 관련자 여행 금지, 북한 화물 검색 협력, 이행조치 보고, 제재위원회 설치</li> <li>• 한, “UN 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금강산 관광·개성 공단 사업과 무관(한국 정부)</li> </ul>

일 시	내 용
10. 16	<p>미, 지하 핵실험 공식 확인</p> <p>미 국가정보국장실(ODNI), “함경북도 풍계리 인근에서 채취한 대기 샘플에서 방사능 물질 탐지, 핵 폭발력은 1kt 미만”</p>
10. 17	<p>북 외무부 대변인 성명, “누구든지 UN 안보리 결의를 내들고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려 든다면 가차 없이 무자비한 타격을 가할 것”</p> <p>프라드코프 (Mikhail Fradkov) 러 총리 방한</p>
10. 18	<p>한, 북 핵실험에 따른 제재로 금강산 관광객 정부 보조금 지원 중단</p> <p>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일(18~19)·한(19~20)·중(20~21)·러(21~22)순방</p> <p>부시 미 대통령, “북한이 핵무기를 이전하려 한다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p> <p>아소 다로 일 외상,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일본의 핵 무장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p>
10. 19	<p>한·미·일 3국 외무장관 회담 (서울, 라이스 순방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 안 할 것”</li> <li>• 라이스 장관, 노무현 대통령 면담에서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참여 촉구</li> </ul> <p>UN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가동</p>
10. 20	<p>중, 북 2차 핵실험 징후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북한 의도 분명치 않아, 예의 주시</li> <li>• 미: 특별히 놀라운 것 없다</li> <li>• 일: 북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해 어떠한 양보도 할 계획 없다</li> </ul> <p>아소 다로 일 외상,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회담, 노무현 대통령 예방 핵실험 성공을 환영하는 군민대회 행사(평양)</p>

일 시	내 용
	<p>제38차 한미 SCM (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개최</p> <p>핵우산 (Nuclear Umbrella) 제공을 통해 확장된 억제 (Extended Deterrence)의 지속을 포함</p>
10. 22	<p>홍콩, UN 대북 제재 결의로 북 화물선 '강남 1호' 억류</p> <p>&lt;노동신문&gt;</p> <p>"제국주의자들에게 양보하고 타협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는 것이다"</p>
10. 24	<p>중 외교부, "김정일은 현재 2차 핵실험을 진행할 계획이 없지만 외부로부터 더 큰 압력이 가해지면 진일보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10. 25	<p>한 과학기술부, "북의 핵실험 공식 확인", 제논 (Xenon, 크세논) 강원도 간성 휴전선 일대 검출</p> <p>북 조평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남이 미국의 반공화국 제재 행동에 가담한다면 우리는 6·15 공동선언에 대한 전면 부정으로, 동족에 대한 대결 선언으로 간주하고 해당되는 조치를 취할 것"</p> <p>라이스 장관, "북 6자회담 복귀해도 UN 안보리 제재 유지하기로 한·미·일·중·러 5개국과 합의"</p>
10. 26	<p>UN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제재 대상 품목에 잠정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기부터 사치품까지, 금강산 관광·개성 공단 사업은 거론 안됨</li> <li>• 한, UN 안보리 제재 대상이 되는 북 인사 국내 입국 불허</li> </ul> <p>홍콩에서 북 화물선 강남 5호 억류</p>
10. 30	<p>힐 차관보, 호주 방문 일정 줄이고 중국행</p>
10. 31	<p>미·북·중, 3자 회동 (북경)에서 6자회담 개최에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힐, 우다웨이, 김계관 비공식 회담 통해 합의</li> <li>• 라이스 장관, "6자회담 재개시 5MWe 원자로나 영변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의 해체, IAEA 사찰단 활동 등 요구할 것"</li> </ul>

일 시	내 용
11. 01	UN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1718호 결의의 이행사항 중 첫 단계로 북 금수 대상 품목 확정  북 외무성 대변인, “6자회담 틀 안에서 조미(朝美) 사이에 금융제재 해제문제를 논의 해결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회담에 나가기로 하였다”
11. 04	북 외무성 대변인, “일본이 6자회담에 참가하지 않겠다면 더 없이 좋은 일”
11. 13	한, PSI 정식 참여 유보
11. 15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서 조속한 진전 (early progress) 방안 마련(하노이)
11. 18	한, UN 대북 인권 결의안 채택에서 첫 찬성표  한·미·일 3국 정상회담(하노이, APEC), “북핵 폐기 압박·유인책 병행”  한·미 정상회담(하노이) 미 백악관, “북 핵 프로그램 철폐·핵 야망 포기 시 한국전 종료 선언”
11. 18~ 19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하노이)서 북핵포기와 6자회담 조기 개최 촉구하는 의장 특별 성명 채택 정상회의 공식선언인 ‘하노이 정상선언’에는 미포함
11. 20	부시 미 대통령, 북 핵 포기 시 종전선언 언급
11. 20~ 21	힐 차관보-우다웨이 부부장 회동
11. 27	한·미·중·일 4개국 6자회담 대표 연쇄 접촉서 6자회담 재개 문제 논의 (베이징)
11. 28~ 29	미·북 수석대표 회담, 접점 못 찾음
11. 30	미, 대북 금수 사치품 60여 개 확정

일 시	내 용
12. 01	김계관 북 외무성 부상, “비핵화는 김일성 수령의 유훈”, “일방적인 핵 포기는 있을 수 없다”
12. 18	제5차 2단계 6자회담 개최 (베이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 미, 인내의 한계를 초고했다. 행동이 필요할 때</li> <li>• 북: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해서는 금융 제재 해제가 선결</li> <li>• 중: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적극적인 성과 기대</li> <li>• 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일본의 안보와 지역사회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며 일·북 평양선언 및 공동성명을 위반한 행위</li> <li>• 라: 6자회담의 최종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정상적 조건을 조성하는 것</li> </ul>
12. 19	BDA (방코델타아시아) 실무회의 (베이징 주중 미대사관) BDA에 동결된 북한자금 문제해결
12. 20	북-미, BDA 실무회의 (베이징 주중 북한대사관)
12. 22	제5차 2단계 6자회담 휴회
2007. 01. 16~18	김계관 부상-힐 차관보, BDA 문제 합의 (베를린)
01. 30~31	오광철 북 조선무역은행 총재-미 대니얼 글레이저 (Daniel Glaser) 재무부 금융범죄담당 부차관보 BDA 회담 (베이징)
02. 08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 재개
02. 12	미, 북 계좌 1,100만 달러 해제 통보
02. 13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 (Initial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2·13합의)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일간의 단계별 핵불능화 이행 (Phased Implementation) 합의</li> </ul> <p>[1 단계, Phase I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영변핵시설의 플루토늄 생산의 중지 (shutdown)</li> </ul>



일 시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중유지원개시 (initial shipment)</li> </ul> <p>[2 단계, Phase I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금년내 모든 현존 핵시설 불능화 (disablement) 및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complete and correct) 신고 완료</li> <li>• 테러지원국 (SST: State Sponsor of Terrorism) 지정 해제 과정 개시 및 대적성국 교역법 (TWEA: Trading with the Enemy Act) 적용 종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농축 프로그램(UEP: Uranium Enrichment Programme)에 따른 핵무기 개발과 기존 핵탄두 해체 문제 등의 사항은 불능화 완료 및 북의 신고(Declaration)가 접수된 후인 3 단계 (Phase III) 과정에서 추후 협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합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내 핵시설의 폐쇄·봉인 및 IAEA 요원 복귀,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 작성 협의 (60일 이내)</li> <li>• 60일 이내 중유 5만 톤 상당 긴급에너지 대북 지원</li> <li>• 미·북·북·일 관계정상화 위한 양자 대화 개시 (60일 이내)</li> <li>• 대북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다음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핵계획 완전 신고 및 IAEA 사찰단 복귀 수용,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 불능화(Disabling) 기간 중 중유 100만톤 (초기 5만 톤 포함) 상당의 지원 제공</li> </ul> </li> <li>• 6자회담내 5개 실무그룹 (WG) 구성 (30일내 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 비핵화, △미·북 관계정상화, △일·북 관계정상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체제</li> </ul> </li> <li>• 초기단계 조치 이행 완료 이후, 6자 장관급 회담 개최</li> <li>• 직접 관련 당사국 간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li> </ul> </li> </ul>
03. 06	<p>미 국무부, “고농축우라늄 (HEU) 핵무기 개발 계획 포함 모든 핵 프로그램 폐기해야”</p> <p>북미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 개최 (뉴욕)</p>
03. 07	<p>북일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 개최 (하노이)</p>

일 시	내 용
03. 13~ 14	IAEA 사무총장 방북
03. 19	<p>힐-대니얼 글레이저, 미 정부의 BDA 자금 해결 원칙을 담은 성명 발표 (베이징)</p> <p>“베이징 중국은행에 개설된 조선무역은행 계좌로 송금, 인도적이고 교육적인 목적을 포함, 북한 인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에만 사용”</p>
03. 19~ 22	제6차 6자회담 1단계 회의 개최
03. 22	BDA 자금 미입금으로 김계관 외무성 부상 귀국, 우다웨이 부부장 휴회 선언
04. 08~ 12	<p>빌 리처드슨 미 뉴멕시코 주지사와 함께 빅터 차 (Victor D. Cha)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 방북</p> <p>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송환 논의, '2.13' 합의에 따른 핵 프로그램 폐기 필요성 언급</p>
04. 10	<p>미 재무부, 마카오 당국의 BDA 동결자금 해제 지지 성명 발표</p> <p>마카오 당국, “북한 동결자금 해제조치가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해 계좌 소유주들의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 발표</p>
04. 13	북 외무성, BDA 문제 관련 성명 발표, “현실로 증명되었을 때 행동”
05. 15	북 외무성, BDA 자금의 자유로운 송금 실현 시 2·13합의 실현
06. 16	이제선 북 원자력 총국장, IAEA 실무대표단 초청 서한 발송
06. 21~ 22	힐 차관보 방북, 북 영변 원자로의 빠른 시일내 폐쇄 언급
06. 25	러 극동사업은행, BDA 자금 북 대외무역은행 계좌로 입금 발표
06. 25	북 외무성, 북 계좌로 BDA 동결자금 송금 확인

일 시	내 용
06. 26~ 30	IAEA 실무단 방북, 2·13합의에 따른 핵시설의 폐쇄·검증 문제 등 협의
07. 14	한국 제공 중유, 선봉항 도착 (총 5만 톤 중 1차 6,200톤)  북 외무성 대변인, “중유 5만 톤의 첫 배분이 도착한 14일 영변핵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인원들에게 그에 대한 감시를 허용 하였다”(15일)
07. 15	IAEA, 영변 원자로 폐쇄 확인
07. 18	IAEA, 영변 5개 (5MWe 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봉 제조 공장, 50MWe 원자로, 200MWe 원자로) 핵시설 폐쇄 확인
07. 18~ 20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베이징)  9월 초 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개최, 장관급회의 개최
08. 02	한, 대북 중유 5만 톤 공급 완료
08. 07~ 08	6자회담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회의 (판문점)
08. 16~ 17	6자회담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 (선양)  북, 불능화 핵시설 대상에 영변 50MWe 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 (재처리시설) 거론
08. 20	6자회담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회의 (모스크바)
09. 01~ 02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2차 회의 (제네바)  핵시설 연내 불능화와 전면 신고 합의
09. 11~ 15	미·중·러 ‘북핵 불능화 기술팀’ 방북
09. 18	북 외무성, 북·시리아 핵협력 의혹 부인

일 시	내 용
09. 23	중, 2차분 대북 중유 5만 톤 공급 완료
09. 28~ 10. 03	<p>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Second-Phase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10·3합의)</p> <p>◆ 2·13합의의 2번째 단계 이행을 위한 조치들(Second-Phase Actions)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핵 물질,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 재확인</li> <li>● 미국은 미·북 관계정상화 WG에서 컨센서스를 기초로 북측 조치와 병행하여 미측 공약 이행할 것이며, 일·북 또한 평양선언에 따라 신속한 관계 정상화 노력 경주</li> <li>● 중유 100만 톤 상당 대북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제공</li> <li>● 적절한 시기에 6자 외교장관회담 북경에서 개최 재확인</li> </ul> <p>◆ 주요합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불능화 활동을 주도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한 초기 자금을 제공할 것. 첫번째 조치로서 미국은 불능화를 준비하기 위해 향후 2주내에 북한을 방문할 전문가 그룹을 구성할 것</li> <li>● 북한은 2·13합의에 따라 모든 자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합의하였다.</li> <li>● 북한은 핵 물질, 기술 또는 노하우를 타국에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재확인함.</li> <li>● 북한과 미국은 양자관계를 개선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가겠다는 공약을 유지함.</li> <li>● 2·13합의에 따라, 중유 100만 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이미 전달된 10만 톤 중유 포함)이 북한에 제공될 것</li> </ul> <p>◆ 2차 북핵협상 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차 회담 ('03. 4. 23~25): 6자 회담으로 북핵문제 해결</li> <li>● 제 1차 6자회담('03. 8. 27~29): 한반도 비핵화, 평화적 해결</li> <li>● 제 2차 6자회담('04. 2. 25~28): 의장성명 형식 합의 도출</li> <li>● 제 3차 6자회담 ('04. 6. 23~26): '행동 대 행동' 원칙 공감</li> </ul>

일 시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 4차 6자회담, '9·19공동성명', 제1단계 회의 ('05. 7. 26~8. 7), 제2단계 회의 ('05. 9. 13~19)</li> <li>● 제 5차 6자회담: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2·13합의) 제1단계 회의 ('05. 11. 9~11) 제2단계 회의 ('06. 12. 18~22)</li> <li>◆ 북미 베를린 합의 ('07. 1. 16~18)</li> <li>● 제3단계 회의 ('07. 2. 8~13)</li> <li>● 제 6차 6자회담: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10·3합의)</li> <li>● 제1단계 회의 ('07. 3. 19~22)</li> <li>● 수석대표회의 ('07. 7. 17~20)</li> <li>● 제2단계 회의 ('07. 9. 27~30)</li> </ul>
10. 02~ 04	<b>제2차 남북정상회담 (평양)</b> “핵문제 해결 위해 9·19공동성명, 2·13합의 이행 노력” 명시
10. 03	<b>제6차 6자회담 2단계 합의 내용을 토대로 10·3합의 발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 비핵화</li> <li>● 미북 및 북일 간 관계정상화 노력</li> <li>● 대북 경제 및 에너지 지원 등을 선언</li> </ul>
10. 11~ 18	<b>북핵 불능화 실무팀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 외 8명) 방북</b> 영변 핵원자로, 재처리시설, 핵연료봉 제조공장 등 3개 핵시설을 시찰 및 불능화 위한 10여 개 항 합의
11. 01~ 05	<b>미 불능화팀 방북, 불능화 조치 착수</b>
11. 06	<b>루거 미 의원의 보좌관 방북, '협력적 위협감축 프로그램' 합의</b> '협력적 위협감축 (CT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프로그램: 1990년대 초 소련의 붕괴로 인한 대량살상무기 (WMD) 확산 방지를 위해 미 상원의 리처드 루거 (Richard Lugar) 의원과 샘 년 (Sam Nunn) 의원의 주도로 만들어진 법안을 근거로 한 프로그램. 경제적 지원의 대가로 핵무기를 폐기하거나 반출하는 법안
11. 27	<b>북핵 불능화 실사단 방북</b>

일 시	내 용
11. 29	힐 차관보, 북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 (UEP) 문제 해결 필요 언급
12. 01	우라늄농축프로그램 (UEP) 관련 의혹 부인, 로켓탄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미국 측에 설명
12. 03~ 05	힐 차관보 방북, 부시 미 대통령 친서 전달
12. 19~ 21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 방북 우라늄농축프로그램 (UEP) 추진 및 대 시리아 핵확산 의혹 관련사항 신고 문제 논의
12. 26	현학봉 북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 “경제적 보상의무의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 불능화의 속도를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
12. 31	북, 전면 핵신고 기한 미준수  북, 영변 불능화 작업인원 감축 통보
2008. 01. 04	북 외무성, “수입 알루미늄관을 이용한 군사시설을 참관시켰다”
01. 07~ 08	힐 차관보, 한·중·일·러 방문
01. 29~ 02. 02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 방한 (29일), 방중 (30일), 방북 (31일) 완전하고 정확한 핵신고를 북한에 촉구
01. 31	왕자루이 중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방북, 김정일, “6자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02. 05	맥코넬(Mitch McConnell) 미 국가정보국장 상원정보위에 출석, 북의 HEU 프로그램 지속 추진 및 핵확산 활동의 지속 주장
02. 19	김계관 부상-힐 차관보, 핵 신고 논의 (베이징)
02. 21	김계관 부상-천영우 본부장 양자회담 (베이징)

일 시	내 용
02. 25	<b>이명박 대통령 취임</b>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하면 남북협력에 새 지평이 열릴 것입니다.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10년 안에 북한 주민 소득이 3천 달러에 이르도록 돕겠습니다”
02. 26	<b>라이스 미 국무장관, 북핵문제 협의차 방중</b>
02. 26	<b>뉴욕 필하모닉 평양공연 (평양 동평양대극장)</b>
03. 13~ 14	<b>김계관 부상-힐 차관보, 핵 신고 논의 (제네바)</b> 힐 차관보, “신고 형식에 유연 대처”
03. 19	<b>김하중 통일부 장관, “북핵문제 타결 없이 개성공단 확대 어려워”</b>
03. 26	<b>김태영 합참의장, “중요한 것은 적(북한군)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 (북의 핵공격 시 대처방법 질문) 답변</b>
03. 28	<b>북, 서해 단거리 함대함 미사일 3차례 발사 (김 합참의장 답변 반발)</b>  북 해군사령부 대변인, 서해 NLL수역 남북충돌 경고  북 외무성 대변인, 기존의 핵 불능화 조치도 철회할 수 있다고 경고
04. 08	<b>김계관 부상-힐 차관보, 핵 신고서 내용 잠정 합의 (싱가포르)</b> 북미 비공개 양해서 채택
05. 08~ 10	<b>영변 원자로 가동일지 제출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 방북)</b> 미국은 50만 톤 식량 제공 공식 발표
06. 26	<b>핵 신고서 제출</b> 미,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의 해제 절차 착수 내용: 약 26kg의 플루토늄을 핵무기용으로 재처리, 사용 후 연료봉 가운데 7~8kg의 미추출 플루토늄 보유
06. 27	<b>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발</b>
06. 28	<b>라이스 미 국무장관 방한</b>

일 시	내 용
06. 30	글렌 수정안 (Glenn Amendment) 및 이를 반영한 추경예법안 통과 *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의 102(a) 조항의 개정: 핵기폭 장치의 폭발 실험을 감행한 NPT 가입국 중 비핵국가에 대한 지원 금지 규정
07. 06	<교토통신> 이명박 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날 준비 돼 있다”
07. 08	북 조평통 대변인 담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라”
07. 10~ 12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 (7.12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 비핵화 검증체제 수립</li> <li>● 6자회담 틀 내에 감시체제 수립</li> <li>● 핵 포기와 경제지원 위한 시간계획 작성</li> <li>●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지도원칙” 계속 논의</li> <li>● 베이징에서 6자 외교장관회의 개최</li> </ul>
07. 11	이명박 대통령, 국회 국정연설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및 10·4선언 이행을 북과 협의할 용의 밝힘.
07. 11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07. 23	6자 외교장관회담 개최 (싱가포르)
08. 11	미, 북 테러지원국 해제 연기
08. 11~ 13	6자회담 국교정상화 실무회의 (중국 선양)
08. 14	북,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 중단 (26일 발표)  성 김 미 대북특사 방중
08. 15	김 숙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힐 차관보, 북핵 검증 회동 (뉴욕)
08. 18	<조선중앙통신> 테러지원국 명단 미삭제는 ‘행동 대 행동’ 원칙 위반



일 시	내 용
08. 22	북-미, 북핵 검증체계 관련 회동 (뉴욕) 미, '완전하고 정확한' 핵 검증을 위한 이행계획 제시
08. 24	베이징 올림픽 폐막 (8. 8~24)
08. 25	한·중 정상회담 (서울), 비핵화 2단계 조치의 전면적이고 균형있는 이행 촉진
08. 26	북 외무성, '불능화 중단' 발표 및 영변 핵시설 원상복구 고려한다고 경고 ● 중: 친강 (秦剛) 외교부 대변인, "6자회담을 계속 진전시켜야 한다" ● 한: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 "유감스러운 조치" ● 미: 데이너 페리노 (Dana Perino) 백악관 대변인, 북은 테러지원국 해제 조건 미충족
09. 05	6자회담 참가국 (한,미,일,중) 수석대표 회동 (베이징)
09. 09	9·9절 행사에 김정일 불참
09. 19	북핵 6자회담 경제·에너지 지원 실무협약의 (판문점) 현학봉 북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 "복구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복구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나 같다"
09. 22	북, 영변 핵 봉인 제거 요청
09. 24	이란민족저항평의회(NWRI), "북한 전문가들이 이란의 샤하브-3 미사일 그리고 이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의 개발을 돕고 있다"
09. 26	<워싱턴포스트(WP)> ● 미, 북핵 검증 과도해, 과거 핵 관련 목적을 가졌었던 모든 지역의 물질에 대해 완전한 접근을 허용(full access to all materials) ● 군사 시설을 포함, 핵과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되는 어떤 지역, 어떤 시설, 어떤 장소든 완전한 접근 (full access to any site, facility or location)

일 시	내 용
10. 01~ 03	힐 차관보 일행 방북
10. 07	북, 서해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10. 11	<p>미, 북 테러지원국 해제</p> <p>중, “테러지원국 해제 긍정평가”</p> <p>&lt;미북 간 합의내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자회담 당사국의 전문가들이 검증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의 전문가도 포함된다.</li> <li>•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핵검증에 중요한 자문과 지원 역할을 담당한다.</li> <li>• 전문가들은 신고된 모든 시설에 접근할 수 있으며 신고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상호 동의에 의해 접근한다.</li> <li>• 샘플링과 실증적으로 규명해내는 과학적인 절차의 이용에 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li> <li>• 검증체계에 포함된 모든 조치들은 플루토늄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모든 우라늄 농축, 핵확산 활동 등에 적용된다. 여기에 6자회담 당사국들 사이에 이미 합의된 감시체계는 핵확산과 우라늄 농축 활동에 대해 적용된다.</li> </ul>
10. 12	북, 핵 불능화 작업 재개
10. 13	<p>북, IAEA 검증단 핵시설 접근 허용</p> <p>북, 핵시설 불능화 재개 (연료봉 제거)</p>
10. 15	프랭크 자누지 (Frank Zanuzi) 상원 외교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미 에너지부가 의회에 북핵 폐기 예산으로 3억 달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 (워싱턴)
10. 21	<p>&lt;닛케이 신문&gt;</p> <p>에너지 지원 대신 북의 핵 프로그램을 폐기에 160억 엔 규모의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 보도</p>
10. 22	뉴질랜드, 대북 중유지원 고려

일 시	내 용
11. 07	리 근 미국국장, 북핵 검증, 핵불능화, 에너지 지원 문제 협의(뉴욕) 미북간 샘플링 문제 협의 힐, “과학적 절차에 의한 검증이 시료채취를 포함한 다양한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서로 완전히 이해”
11. 12	북 외무성, 시료채취 거부 “검증 방법은 현장방문, 문건확인, 기술자들과의 인터뷰로 한정”
11. 15	<조선신보> 시료채취는 불능화 이후 논의. “무력화(불능화) 단계는 핵시설 폐기 과정의 도입부에 지나지 않으며 핵무기 문제의 논의는 조선이 현존 핵계획을 포기한 다음의 의제”
11. 18	미 식량 50만 톤 중 5차분 북 남포항 도착
11. 25	미 국무부, 6자회담 틀 안에서 시료채취 명문화 노력
12. 04~ 05	힐-김계관, 양자회담 (싱가포르) “문서 표현에 견해차”
12. 08~ 11	제6차 6자회담 3차 수석대표회의 (베이징)
12. 09	미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 (USJFCOM), 북 핵보유국 표기 파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 “미국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 (10일)</li> <li>● 한, “미국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아니라는 의견을 취하고 있다”</li> <li>● 미 합동군사령부, “관련 보고서는 북한의 (핵) 지위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10일)</li> <li>● 미 로버트 게이츠 (Robert M. Gates) 국방장관, “북한은 여러 개의 핵폭탄을 제조했다” (12일)</li> </ul>
12. 12	미, 대북 중유지원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머지 5개국도 대북중유제공 중단을 양해했다”</li> <li>●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 외무차관, “동의를 한 적이 없다”(13일)</li> <li>● 호주-뉴질랜드 대북중유지원 잠정 보류(17일)</li> </ul>

일 시	내 용
2009. 01. 13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 “우리가 9·19공동성명에 동의한 것은 ‘비핵화를 통한 관계개선’이 아니라 바로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라는 원칙적 입장에서 출발한 것”
01. 08	미 대북 지원식량 6차분 남포항 도착 (총 50만 톤 중 옥수수 2만 1천 톤)
01. 15~ 19	황준국 외교통상부 북핵기획단장 방북, 미사용연료봉 처리 문제 논의
01. 15	미 대북 지원식량 7차분 ‘옥수수와 콩 혼합물’과 식용유 등 4천 940톤 선적 완료
01. 17	북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가 뒤따를 것”  북 조평통 성명, “남북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 등을 무효화” 하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서해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 한다” 발표
01. 20	버락 오바마(Barack H. Obama) 대통령 취임
02. 05	리언 파네타 (Leon Panetta)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 지명자, 북의 2006년 핵실험을 ‘핵무기 (Nuclear Weapon) 폭발’로 표현
02. 13	힐러리 장관, 아시아 순방 전 아시아소사이어티 연설 (뉴욕) “북한이 진정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할 준비가 돼 있다면 미국은 관계정상화, 평화조약체결, 에너지·경제지원에 나설 용의가 있다”
02. 19~ 20	북핵 6자 동북아 안보회의 개최 (모스크바)
02. 20	미, 대북특사에 스티븐 보즈워스 (Stephen Bosworth) 전 주한 미대사 예정
02. 24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 광명성 2호 발사 준비
03. 02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6자회담 수석대표)에 위성락 임명

일 시	내 용
03. 09	<p>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다음 4 항목의 경고 메시지 공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혁명무력은 나라의 자주권과 신성한 령토, 령해, 령공을 침범하는 적들의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해서도 그 즉시 무자비한 군사적 행동으로 대응할 것임.</li> <li>● 우리의 평화적위성에 대한 요격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위력한 군사적 수단에 의한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대답하게 될 것임.</li> <li>● 당면하여 북침전쟁연습이 진행되는 기간 개방되어있는 동, 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다 엄격한 군사적 통제를 실시하게 될 것이며 북남군통신도 차단할 것임.</li> </ul>
03. 24	<p>북 외무성 담화</p> <p>평화적 로켓 발사에 대한 적대행위를 이유로 6자 회담의 존재 기초 부정 설명</p>
03. 30	<p>개성공단 한국 근로자 억류</p>
04. 05	<p>장거리 로켓 (광명성 2호) 발사</p> <p>오바마 미 대통령, 체코 프라하 연설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 연설 중 "북한이 다시 한 번 규칙을 위반했다"</p>
04. 14	<p>북의 로켓 발사를 비난(condemn)하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적절한 조치</li> <li>● 북, 6자회담 불참, 기존 합의 파기, 핵시설 불능화 원상복구 선언</li> </ul>
04. 18	<p>북 총참모부 대변인, "PSI는 선전포고"</p>
04. 19	<p>한, PSI 전면참여 발표 연기</p>
04. 20	<p>샘 브라운백 (Sam Brownback) 미 상원의원, 북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제출</p>
04. 20	<p>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p>
04. 24	<p>세르게이 라브로프 (Sergei Lavrov) 러 외무장관 방북,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면담</p>

일 시	내 용
04. 25	북 외무성 대변인 “폐연료봉 재처리 시작”
04. 29	북 외무성 대변인 성명,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 경수로 발전소 연료 자체 해결(우라늄 농축)” 할 것을 경고  미, “핵실험 위협 등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뿐”
05. 07~ 12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중·한·일 방문
05. 08	북 외무성 대북 적대하는 미와는 대화 무용 입장 발표
05. 12~ 14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사, 러 방문
05. 25	2차 핵실험 (함북 길주군 풍계리)
05. 26	한, PSI 전면참여 선언 북,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 발사
05. 27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성명, “조선반도를 전쟁상태로 몰아넣었다”,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다”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성명, “북남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전쟁위험 계선을 넘어서게 됐다”
05. 30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부 장관, “북한을 절대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
06. 02	미 북핵 대응 ‘범정부 대표단’ 방한
06. 03	미 상원의원 8명, 국무부에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청  미 국무부, 테러지원국 법적 요건에 도달 못해
06. 12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1874호 (Resolution1874) 만장일치 채택

일 시

내 용

<결의 1718호와 결의 1874호 비교>

	1718호(2006.10.14)	1874호(2009.6.12)
수위	규탄	가장 강력하게 규탄
화물 검색	• 금지물품(금수무기, WMD, 미사일) 적재한 화물 검색	• 공해상 의심선박 검색 • 금지품목 발견 시 압류·처분
수출 통제	• 무기류, 미사일, WMD, 사치품, 관련 기술훈련 및 서비스	• 모든 무기 관련 물자
금융 제재	• WMD·미사일 관련 개인·단체의 재원 동결	• WMD·미사일에 기여할 수 있는 재원 동결을 포함한 금융거래 금지 및 대북 무역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금지 • 무상원조, 금융지원, 양허성 차관의 계약금지 및 기존 계약 감축

06. 13 <북 외무성 성명>

- 첫째,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 전량을 무기화한다. 현재 폐연료봉은 총량의 3분의 1 이상이 재처리되었다.
- 둘째, 우리나라 농축 작업에 착수한다. 자체의 경수로건설이 결정된데 따라 핵연료 보장을 위한 우리나라 농축 기술개발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시험단계에 들어섰다.
- 셋째,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봉쇄를 시도하는 경우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단호히 군사적으로 대응한다.

06. 19 미 재무부, 미 금융기관에 북 불법 금융거래 경계 조치

07. 23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태국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서 “우리는 절반의 조치에는 관심이 없다”, “미국이 마련한 포괄적 패키지에는 전면적인 관계정상화 외에 항구적 평화체제, 그리고 에너지 및 경제지원이 모두 담겨있다”며 “앞으로 미국뿐 아니라 6자회담 관련국들이 ‘포괄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협의해 패키지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게 될 것”, ‘비가역적 조치의 기준’은 9·19공동성명에서 규정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

일 시	내 용
08. 05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방북, 여기자 석방
08. 10~ 17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방북, 개성공단 억류직원 귀환(13일)
08. 17~ 19	우다웨이 중 외교부 부부장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양자(兩者)와 다자(多者) 회담에 참가할 용의가 있다”(18일)
08. 23	북 특사조의방문단 청와대 예방
09. 04	UN주재 북 상임대표 안보리 의장에 편지, “폐연료봉의 재처리가 마감단계에서 마무리되고 있으며 추출된 플루토늄이 무기화되고 있다”, “우라늄 농축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결속단계에 들어섰다”
09. 15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북한과의 양자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것은)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북한에) 6자회담의 목적과 그에 상응하는 대가와 인센티브가 무엇인지를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
09. 21	이명박 대통령, 그랜드 바겐 (Grand Bargain) 제안 미국외교협회 (CFR), 코리아소사이어티 (KS), 아시아소사이어티 (AS) 공동주최 오찬 (뉴욕), “이제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 타결, 즉 ‘그랜드 바겐’을 추진해야 한다”
09. 23	이명박 대통령, UN 총회 기조연설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 즉 그랜드 바겐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관련국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09. 25	<조선중앙통신> 러시아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식량이 함경북도 라진항에 도착, 현지에서 기증식



일 시	내 용
09. 29	박길연 북 외무성 부상, UN 총회 기조연설 (현지 28일) “미국이 제재를 앞세우고 대화를 하겠다면 우리 역시 핵 억제력 강화를 앞세우고 대화에 임하게 될 것”
09. 30	<중앙통신> “남조선 고위당국자의 「일괄타결」(그랜드 바겐) 제안이 ‘비핵·개방·3000’의 답습으로 백해무익하다”
10. 04~ 06	원자바오 중 총리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 “북미 양자회담의 상황을 지켜본 뒤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을 진행할 것”(5일)
10. 14	<노동신문> “미북 평화협정 체결만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방도”
10. 23~ 11. 03	리근 미국국장 방미 (뉴욕) (귀국, 현지 2일)  리근 미국국장-성 김 북핵특사 비공식 회동 (24일)
10. 29	북 중앙통신, 후진타오 중 주석이 김정일 방중 요청
10. 30	월터 샤프 (Walter L. Sharp) 한미연합사령관, “북한의 WMD를 제거하는 작전은 미군이 주도하기로 합의”
11. 01	정부 고위 관계자, 작전계획 5029에서 북 핵시설과 핵무기의 제거는 미군이 맡는 방향
11. 02	북 외무성 대변인,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북미 양자회담 개최에 미국이 결단을 내릴 차례”, (리근-성김 회동은) “조미회담을 위한 예비 접촉이 아니었고 따라서 접촉에서는 조미대화와 관련되는 실질적인 문제가 토의된 것이 없다”
11. 03	<조선중앙통신> “8,000대의 폐연료봉재처리를 8월말까지 성과적으로 끝냈다”

일 시	내 용
11. 04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패키지 딜'
11. 08	<p>&lt;민주조선&gt;                      한국의 작전계획 5029 완성은 "군대와 인민에 대한 용납 못할 모독이며 노골적인 도발"</p>
11. 09	자크 랑 (Jack Lang) 하원의원, 니콜라 사르코지 (Nicolas Sarkozy) 프랑스 대통령의 대북특사 자격 방북
11. 10	<p>서해교전 (대청해전) 발생 (NLL 침범해 한 경비정 조준 사격한 북 경비정 반파)</p> <p>북한군 최고사령부, 한국에 사죄 및 재발방지조치 요구</p>
11. 11	미 국무부, 보즈워스 방북 발표 (현지 10일)
11. 12	<p>&lt;노동신문·민주조선&gt;                      서해교전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p> <p>&lt;NHK&gt;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지난달 17~18일 김양건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부장 만나 남북정상회담 논의</p>
11. 13	<p>&lt;연합뉴스&gt;                      오바마 미 대통령, 서면 인터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명박 대통령과 포괄적인 해결 (Comprehensive Resolution)의 필요성에 대해 완전한 의견일치 (in full agreement)</li> <li>● 6자회담이 북핵문제 평화적인 해결 위한 최선의 틀</li> <li>● 2005년 9·19공동성명은 우리가 성취해야 할 분명한 목표</li> <li>●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을 획득 시도는 불안정 요인으로, 평화와 안보에 위협</li> <li>● 한반도의 평화적인 비핵화 위한 6자회담은 북한과 역내에 안전과 번영을 줄 것</li> <li>●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제거를 향해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은 안전과 존경을 향한 평화적인 길 걸을 것</li> </ul>

일 시	내 용
	<p><b>이명박 대통령,</b>                      “우리 정부는 미·일·중·러 등과 협력해 일괄타결 방안 등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대비한 협상 전략을 구체화해나갈 것”</p> <p><b>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 명의 통지문,</b>                      한국에 사과 요구 및 군사조치 위협, “값비싼 대가” 재 언급</p>
<p>11. 19</p>	<p><b>한미정상회담 (서울)</b></p> <p><b>이명박 대통령,</b>                      “우리 두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본인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으로 제시한 일괄타결이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p> <p><b>오바마 미 대통령,</b>                      “양국 공동 접근방식에 대해 완전히 의견이 일치한다”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대표를 12월 8일 북한에 보내 양자대화 시작할 것”, “만일 북한이 구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통해 의무를 준수하고 핵무기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미국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와 완전히 통합될 수 있게 도와줄 것”</p> <p><b>클린턴 장관,</b>                      “우리는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약속을 다시한번 확인한다면 관계정상화,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경제지원 등을 검토하게 될 것” (아프간 카불 주재 미 대사관, 현지 18일)</p>
<p>11. 20</p>	<p><b>미 핵과학자회보,</b>                      “올해 말 현재 핵보유국은 북한을 포함해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9개국”</p>
<p>11. 21~ 24</p>	<p><b>미 외교협회(CFR) 한반도정책 태스크포스(TF)대표단 (프리처드 일행),</b>                      방북 후 “북한의 입장에서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p>

일 시	내 용
11. 23	<p>&lt;노동신문&gt;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충돌을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미(북·미) 사이의 정전 상태를 끝장내고 평화보장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p> <p>미 국무부,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시에 (평화협정과 같은) 그런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것”</p>
11. 24~ 25	<p>세르게이 미로노프 러 상원의장 방북,                      “현재로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는지 말하기 어렵다”</p>
12. 01	<p>친강 중 외교부 대변인, “중국은 북·미 대화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기를 희망하고 이를 통해 6자회담이 재개되고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길 바란다”</p>
12. 02	<p>&lt;조선신보&gt;                      “북미 간 최대 현안은 평화체제 수립”</p>
12. 02	<p>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평화체제 수립은) “남북한이 중심이 돼 6자회담의 별도 포럼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남북한, 그리고 미국과 중국 4자 간 협의가 있어야 한다”</p>
12. 03	<p>캐서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주한 미 대사, “평화협정 체결과 관계 정상화는 9·19공동성명, 또 최근 미국이 제안한 일괄타결 방안에도 포함되는 것”</p>
12. 04	<p>미 국무부, “보즈워스 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오는 8일 평양에 도착, 북한 당국자와 만나 6자회담 재개, 9·19공동성명이행을 촉구할 것”</p>
12. 07	<p>미 국무부, (평화협정은) “이번 방북의 의제가 아니며, 보즈워스 특사도 6자회담에서 다를 사항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p>
12. 08~ 10	<p>보즈워스 특별대표 일행 (성 김 6자회담 미국측 대표, 마이클 쉬퍼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대니얼 러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 찰스 루터스 NSC 비확산 담당 보좌관 등) 방북,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회동 (9일)</p>

일 시	내 용
12. 10	보즈워스 특별대표, “6자회담의 필요성과 역할, 9·19공동성명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통의 이해에 도달했다”(서울 기자회견)
12. 11	<p>북 외무성 대변인,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과 9·19공동성명이행의 중요성과 관련해 일련의 공동인식을 이룩했다”</p> <p>국제 핵물질 위원회 (IPFM) ‘2009 국제핵물질보고서’,  “북한이 2006년 10월에 실시한 1차 핵실험에서 플루토늄을 2kg 사용했으며, 2차 핵실험에는 플루토늄5kg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p>
12. 11~	보즈워스 특별대표 일·중·러 순방
12. 16	<p>켈리 대변인,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와 관련해) “그런 편지가 있었다는 것만 확인해줄 수 있다”</p> <p>보즈워스 특별대표 방북결과 브리핑 (미 국무부),  “6자회담 재개시 비핵화와 연관된 모든 단계, 새로운 평화체제로의 진전, 평화협정, 에너지 및 경제적 지원 공급, 관계 정상화를 논의할 것 / 평화협정 협상의 당사자는 4개국 (한, 북, 미, 중)임을 6자회담 참여국 모두가 동의 / 비핵화 논의 재개 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의제”</p>
12. 17	<p>시진핑 (習近平) 중 국가부주석 이명박 대통령 예방(청와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비핵화 진전을 위해 양국이 계속 긴밀히 협력’</p> <p>한-러 6자회담 수석 대표 회동(모스크바)</p>
12. 23	<p>북, 자칭 ‘해상군사분계선(1999년 9월 선포)’  인근 해역을 ‘평시해상사격구역’으로 지정해 서해 NLL 긴장감 조성</p>
2010. 03. 26	<p>천안함 피격사건  오후 9시 25분 백령도 해상 근처, 대한민국 해군 제2함대사령부 소속 초계함 PCC-772 천안함 침몰. 대한민국 해군 40명 사망, 6명 실종</p>

일 시	내 용
04. 06	<p><b>오바마 미 대통령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 발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내 안보 전략 가운데 핵무기의 역할을 점차 축소시킨다.</li> <li>• 미국 내 핵 확산 및 핵 관련 테러리즘을 예방한다.</li> <li>•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국가가 미국에 대한 생화학무기 공격을 자행할 지라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이란은 NPT를 탈퇴하고, 비확산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된다.</li> <li>• 대한민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핵무기 확장역지력은 유효하다.</li> </ul>
04. 11~ 12	<p><b>이명박 대통령 방미,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b>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참가</p>
04. 21	<p><b>북 외무성, "우리는 필요한 만큼 핵무기를 생산할 것이지만 핵무기를 필요 이상으로 과잉 생산하지 않을 것"</b></p>
04. 22	<p><b>게리 세이모어(Gary Samore) 미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는 미국의 정책은 분명하다"</b></p>
05. 20	<p><b>민·관·군 합동 원인조사단, "천안함 침몰의 원인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어뢰공격" 공식 발표</b></p>
05. 24	<p><b>5·24조치 실행, 이명박 대통령 천안함 사건 관련 담화문 발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항 전면 불허</li> <li>• 남북교역 중단</li> <li>• 우리국민의 방북 불허</li> <li>• 대북 신규투자 불허</li> <li>• 대북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li> </ul>
11. 09~ 13	<p><b>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포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 방북, 영변 핵 단지 내 현대식 우라늄 농축시설 방문보고서&lt;North Korea's Yongbyon Nuclear Complex: A Report by Siegfried S. Hecker&gt; 발행</b></p> <p>"우라늄 농축시설은 매우 현대적이며 깨끗했다. 원심분리기가 설치된 시설은 120m 길이의 푸른색 지붕으로 된 건물이었다. 1000개 이상의</p>

일 시	내 용
	원심분리기가 가지런히 정렬돼 있었다. 2층으로 된 50m 길이의 플랫폼에 3열로 원심분리기가 뺑뺑하게 들어섰다. 북한의 농축 능력은 분리직업단위(SWU) 당 연간 8000kg의 저농축 우라늄(평균 농축도 3.5%)생산. 이 능력이라면 저농축우라늄(LEU)을 최대 2t까지 생산할 수 있고 최대 40kg의 고농축우라늄(HEU)을 얻을 수 있다. 우라늄 농축시설이 설치된 속도를 보면 북한이 파키스탄 및 이란과 협력을 하는 것이 명백하다. 핵확산의 위험도 더욱 커진 셈”
11. 23	<b>연평도 포격 사건</b> 북, 서해 연평도 및 연평도 앞바다에 해안포 50여발 발사, 해병대원 2명 및 민간인 2명 사망, 19명 중경상
11. 30	<b>&lt;노동신문&gt;</b> “수천 대의 원심분리기를 갖춘 현대적 우라늄 농축공장이 돌아가고 있다”
12. 29	<b>월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 “북한이 공개한 약 2천대의 원심분리기를 활용한 우라늄 농축을 고농축 우라늄 (HEU) 형의 원폭 제조에 특화할 경우 연간 1개 정도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다”</b>
<b>2011. 01. 18~21</b>	<b>미중정상회담 및 ‘미중공동성명’ 발표(01.19)</b> <b>후진타오 중 주석 방미,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미 관계 강화</li> <li>● 고위 교류 촉진</li> <li>● 지역적 및 세계적인 도전 과제들의 해결</li> <li>● 한반도 관련: 미국과 중국은 2005년 9월19일 공동성명과 이와 관련된 UN 안보리 결의안에 언급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동의, 양국은 2005년 공동성명과 그에 따른 국제적 의무 및 약속에 위배되는 행동에 반대한다. 양국은 이 문제와 이와 관련된 기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질 것을 촉구한다.</li> <li>● 종합적이고 호혜적인 경제 파트너십 구축</li> </ul>
03. 15	<b>북 외무성 대변인, “조선 측은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에 나갈 수 있고 6자회담에서 우라늄 농축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b>

일 시	내 용
03. 31	<p>토머스 도닐런(Thomas Donilon)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북한은 먼저 한국과 만나 군사적 도발행위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소한 뒤 비핵화를 향한 중요한 비가역적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치에는 우리나라 농축 프로그램 중지에 대한 감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p>
04. 25~ 28	<p>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 방북                      카터 전 대통령을 단장으로 하는 ‘디 엘더스(The Elders)’ 회원 4명(지미 카터(Jimmy Carter), 마티 아티사리(Martti Ahtisaari), 그로 브룬트란드(Gro Brundtland) 매리 로빈슨(Mary Robinson)) 평양 방문, 박의춘 북한 외무상과 회담,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비공개</p>
05. 15	<p>&lt;로이터 통신&gt; UN 극비 보고서 인용,                      북한과 이란이 UN 제재를 위반한 채 탄도미사일 기술을 정기적으로 교환, 불법 기술 이전은 인근 제3국을 통해 이뤄진. 익명을 요구한 일부외교관, 제3국이 중국임을 언급</p>
05. 16	<p>&lt;마이니치 신문&gt;                      북한, 이란에 200명 이상의 기술자를 파견, 핵과 미사일 개발 등 군사기술 지원</p>
06. 20	<p>&lt;산케이신문&gt;                      북한, 지난 5월 한 달간 4차례에 걸쳐 160명의 핵·미사일 전문가 이란 파견</p>
06. 21	<p>에드워드 워너(Edward Warner) 미 국방부 행정책임관,                      “현재 미국은 전략 폭격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북핵 억제 전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p>
07. 07	<p>파키스탄 압둘 카디르 칸(Abdul Qadeer Khan) 박사,                      북한, 1998년 파키스탄으로부터 핵기술 확보를 위해 파키스탄군 수뇌부에 현금 350만달러(32억원)와 보석 등 뇌물 전달</p>
07. 28	<p>뉴욕 북미 고위급 대화                      • 미, 우리나라 농축 임시중지 등 요구                      • 이에 대해 대북제재 임시중지, 식량제공(미국이 3년 전 공약했던 50만 톤 중에서 미달된 33만t) 제시</p>



일 시	내 용
09. 20	<b>북측 6자회담 수석대표 리용호 외무성 부상</b>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 주장 및 제 2차 북·미 대화 제안
09. 21	<b>제 2차 남북 비핵화 회담 개최(베이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북측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단 복귀, 핵·미사일 실험 중지 등 비핵화 사전조치에 동의 요구</li> <li>• 북,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 입장 고수</li> </ul>
10. 13	<b>한미정상회담(워싱턴 D.C.)</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동맹은 '안보의 제1의 축'이며, 미국에게는 '태평양지역 안보를 위한 초석'(the lynch-pin for security in the Pacific region)임을 재확인</li> <li>•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비대칭적 위협 증대, 한·미 동맹의 상호성 강화 및 즉각 대응능력 보강, 대비 태세 강화</li> <li>• '다원적 전략동맹'</li> </ul>
10. 20	<b>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글린 데이비스(Glen Davis)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미 대사 지명</b>
10. 24~ 26	<b>북·미 2차 고위급 대화(스위스 제네바)</b>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중단, IAEA사찰단 복귀, 핵·미사일 실험 중지 등 비핵화 선행조치 및 6자회담 재개 등 협의
11. 02	<b>영국 민간 연구기관 '영·미 안보정보협의회'(British American Security Information Council:BASIC),</b> "북한을 9개 핵보유국 중 하나로 정의, 최소 6기의 핵무기를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
11. 07	<b>IAEA, 「이란 핵 보고서」 발표</b> 이란이 핵무기 개발 작업을 진행, 북한과 구소련, 파키스탄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
11. 28	<b>한스 블릭스 전 IAEA 사무총장, "북한과 이란, 파키스탄 간 핵 협력 가능성은 높다"</b>

일 시	내 용
11. 30	<p>북, 한·미 정부가 요구하는 <b>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b> 등 핵개발 프로그램 가동 중단 요구 사실상 거부</p> <p>“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권리는 우리나라의 자주권과 발전권에 속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추후도 양보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p>
11. 30~ 12. 03	<p>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b>미얀마 방문</b></p> <p>“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금지하는 UN 결의안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세인(Thein Sein) 대통령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 의정서 서명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고, 이미 IAEA와 협의 중”</p>
12. 03	<p><b>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b></p> <p>북, 시리아에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기술 제공</p>
12. 14	<p><b>지크프리드 헤커 스탠포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b></p> <p>“북한이 아직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험적 경수로형 원자로 개발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까지 완공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p>
12. 17	<p><b>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b></p>
12. 28	<p><b>평양 금수산 기념 궁전, 김정일 국방위원장 영결식 거행</b></p>
12. 29	<p><b>김정일 삼남 김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추대</b></p>
<p><b>2012. 02. 29</b></p>	<p>[2.29합의]</p> <p>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 동시 발표(평양, 워싱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19공동성명 이행, 정전협정 준수, 평화협정 체결</li> <li>● 북한: 조미쌍방은 9·19공동성명 이행의지를 재확인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정전협정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초석으로 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li> <li>● 미국: 미국은 9·19공동성명 준수 의지를 재확인한다. 미국은 1953년 정전협정을 한반도 평화·안정의 기초로서 인정한다.</li> <li>◆ 신뢰조성조치 합의</li> <li>● 북한: 쌍방은 또한 조미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련의 신뢰조성조치들을 동시에 취하기로 합의하였다.</li> </ul>

일 시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정확한 언급 없음</li> <li>◆ 대북 적대정책 폐기, 북미관계 정상화 합의</li> <li>• 북한: 미국은 조선을 더 이상 적대시하지 않으며 자주권 존중과 평등의 정신에서 쌍무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재확인 하였다.</li> <li>• 미국: 미국은 대북 적대외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상호 주권 존중과 평등의 정신에 입각하여 양자 관계 개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재확인한다.</li> <li>◆ 민간교류 확대 합의</li> <li>• 북한: 미국은 문화, 교육,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인적교류 확대 조치들을 취할 의사를 표명하였다.</li> <li>• 미국: 미국은 문화, 교육, 스포츠 분야 등에서 인적 교류를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li> </ul>
03. 16	<p>북, 4월 15일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맞아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계획 발표</p> <p>빅토리아 놀런드 국무부 대변인 “북한의 로켓 발사 발표는 2월 핵 모라토리엄 발표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식량을 지원할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p>
03. 19	<p>이명박 대통령, 북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장거리 핵무기 운반 수단인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는 중대 도발 행위로 규정</p> <p>&lt;조선중앙통신&gt; “단언하건대 우리의 위성 발사는 북미 합의와 전혀 관련이 없다”</p>
03. 26~ 27	<p>핵안보 정상회의 개최(서울)</p> <p>아시아 14개국, 유럽 23개국, 중동 7개국, 아메리카 6개국, 아프리카 3개국, 국제기구(INTERPOL, UN, IAEA, EU)대표 참가</p>
04. 07	<p>미, 괌에서 공군기편으로 비밀리에 방북</p> <p>시드니 사일러(Sydney Seiler)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한국담당보좌관, 조지프 디트라니(Joseph DeTrani)국가정보국장실 북한담당관</p>

일 시	내 용
04. 11	북 4차 노동당대표회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추대
04. 13	<p>북,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광명성3호 발사, 실패</p> <p>광명성 3호, 김일성 생일 100주년에 발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공위성으로 7시 38분 발사, 2분 15여초(135초)만에 추락. 2·3단 본체는 3조각, 1단 추진체는 17조각 등으로 분리되어 추락했으며, 1단과 2단이 분리되었는지는 조사 중. 로켓이 상승하면서 1단 추진체가 먼저 폭발했으며, 최고 고도에서 하강할 때 2차 폭발해 2·3단 본체가 3조각으로 분리된 것으로 분석</p> <p>&lt;조선중앙통신&gt;</p> <p>광명성 3호 로켓 발사가 오전 7시 38분 55초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진행됐으나 “구관측위성의궤도 진입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례적으로 보도</p>
04. 16	<p>미·중, 북의 장거리 로켓 발사 비난 의장성명 합의</p> <p>UN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강력 규탄, 의장성명 채택</p>
04. 18	북, 로켓 발사를 규탄한 안보리 의장성명 반발, 북미합의 파기 공식 선언
05. 04	UN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북에 핵 실험 자제 촉구 공동성명(오스트리아 빈)
05. 08~ 10	리자오싱 중 전 외교부장 방북
05. 13	<p>제 5차 한중일 정상회담(베이징)</p> <p>북한 핵실험 도발 강행에 대한 저지 합의</p>
05. 19	<p>G8 정상회의의 공동성명 발표, 미 캠프 데이비드</p> <p>“북한이 국제적인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모든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증명 가능하게, 그리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주장한다”</p>

일 시	내 용
05. 23	<b>&lt;조선중앙통신&gt;</b> 북 외무성 대변인, “원래 우리는 처음부터 평화적인 과학기술 위성 발사를 계획하였기 때문에 핵 시험과 같은 군사적 조치는 예견한 것이 없었다”
05. 30	<b>북, 개정 헌법에 ‘핵 보유국’ 명기</b>
07. 18	<b>&lt;조선중앙통신&gt; 중대 보도</b> 노동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인에게 공화국 원수 칭호 수여
07. 30~ 08. 03	<b>왕자루이 중 대외연락부장 방북, 김정은 접견</b>
08. 18~ 08. 20	<b>미 고위급 관료, 비밀리에 방북</b>
09. 29	<b>쿠트 캠펠(Kurt Campbell)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b> “북한이 2005년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공동성명을 전면 이행하고, 6자회담에 복귀하며, 남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분명한 입장”
10. 08	<b>한-미 당국, 탄도미사일 협상 타결</b> 한국군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현재의 300km에서 800km로 연장 합의, 탄두 중량은 사거리 800km 기준, 기존 500kg 제한 유지
11. 07	<b>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회의</b>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우려를 표명하는 의장 성명 채택
11. 13	<b>&lt;교도통신&gt;</b> 한국 정부, 지난 5월 부산항에 정박했던 시리아행 중국 선박에서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부품 적발, 압수
12. 12	<b>북, 오전 9시 51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b> <b>장거리 로켓인 은하 3호 발사, 정상궤도 진입</b> 은하 3호, 2012년에 계획 및 실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초의 실용위성 발사용 우주발사체. 2012년 11월 23일, 디지털글로브 위성사진

일 시	내 용
	에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새로운 로켓이 건조되는 것이 발견되어 2차 발사 준비 사실이 알려짐. 2012년 12월 1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에서 은하 3호 발사계획을 12월 10일에서 12월 22일 사이로 결정했다고 알림. 이후 연기를 발표했다가 정규 일정대로 12월 12일 발사를 하고, 은하3호 (광명성3호 2호기) 궤도 진입. 사정거리 13,000Km
12. 19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자,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
2013. 01. 01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2013년 북 신년사 발표 '남북 사이의 대결상태 해소', 남북공동선언의 존중과 이행 강조
01. 23	UN 안보리, 대북 규탄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2087호) 2006년의 1718호, 2009년의 1874호에 이은 세 번째 안보리 대북제재로 이전의 대북 제재 결의안보다 범위가 확대, 제재 강도도 강화. 북한의 추가 도발시 안보리가 중대한 조치 조항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재 대상의 확대: 단체 6, 개인 4, 핵·미사일 관련 품목 갱신·추가</li> <li>• 북한 금융기관지점, 대표자, 대리인, 해외 자회사 포함 관련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 촉구</li> <li>• 공해상 의심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 마련 추진</li> <li>• 제재 회피를 위한 대량 현금 이용 수법 환기</li> <li>• 'Catch-all' 성격의 대북 수출통제 강화</li> <li>• 제재 대상 추가 지정 기준 제시 등을 통한 제재위원회의 임무 강화</li> </ul> ※ 'Catch-all' :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가 지정한 대북 금수품목이 아니더라도,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회원국이 판단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시행 장치
	북,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3차 핵실험 준비 완료
01. 30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나로호 발사 성공 나로호: KSLV-I; Korea Space Launch Vehicle-I, 100Kg급의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진입시킨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 과학 위성은 향후 1년간 지구 타원궤도(300×1500km)를 하루 14바퀴씩 돌며 우주 방사선량과 이온층 등 우주환경관측임무 수행  한국, '스페이스 클럽' 11번째 진입

일 시	내 용
02. 12	<p><b>북 제3차 핵실험</b>  <b>&lt;조선중앙통신&gt;</b></p> <p>오후 2시 43분 “우리 국방과학부문에서는 2월12일 북부지하핵시험장에서 제3차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핵실험은 이전보다 폭발력은 크면서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해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됐다고 밝힘. 특히 다중화된 핵억제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으로 과시됐다는 표현으로 이번 핵실험에 사용된 물질이 기존의 플루토늄이 아닌 고농축우라늄(HEU)임을 시사</p>
02. 19	<p>제네바 군축회의, 북한은 한국을 ‘최종 파괴(Final Destruction)’ 하겠다고 위협(핵실험 이후 2차, 3차 조치를 할 수 있다)            EU 27개국, 북 추가 제재 합의</p>
02. 25	<p>대한민국 18대 대통령 박근혜 취임</p> <p>‘북의 핵실험은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며, 최대피해자는 북한이 될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p>
03. 05	<p>북,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p>
03. 07	<p>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094호)</p> <p>기존보다 더 확대된 금수조치 및 금융제재            북한 외교관들의 위법, 이상행위 감시 강화</p>

**<2087호와 2094호 비교>**

	2087호	2094호
목적	은하 3호(2012.12.12) 발사 규탄	제 3차 핵실험(2013.2.12) 규탄
제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 4명(백창호, 장명진, 라경수, 김광일), 단체 6개(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동방은행, 조선금룡무역회사, 토성기술무역회사, 조선연하기계합영회사, Leader International) 추가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 3명(연정남, 고철재, 문정철), 단체 2개(조선 제 2 자연과학원, 조선용봉총회사) 추가지정</li> </ul>

일시

내용

	2087호	2094호
	※총 누계 개인 9명, 단체 17개	※총 누계 개인 12명, 단체 19개
제재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atch Call 성격의 대북 수출통제 강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가 지정한 대북 금수품목이 아니더라도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회원국이 판단하는 모든 품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소화 처리된 윤활유, 벨로우즈 씰 밸브, 특수부식 저항성 강판, 특정 초고온 세라믹 복합물질, 파이로테크닉 작동밸브, 풍동에 사용가능한 측정장비, 과염소산나프롬, 화학용 진공펌프, 핵2, 미사일5, 화학무기1, 보석류 및 고급 자동차</li> </ul>
제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금융기관(지점, 대표자, 대리인, 해외 자회사 포함) 관련 모든 활동 감시 강화 촉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지활동, 결의 위반, 제재 회피에 기여 가능한 북한 항·발 모든 품목에 대한 공급, 판매, 이전 방지 촉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해상의 의심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 마련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토 내 북한 항·발 금수품목 적재 의심화물 검색 의무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재 회피를 위한 대량 현금 (Bulk Cash)이용수법 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수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 이착륙 및 영공통과 불허 촉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재 대상 추가 지정 기준 제시 등을 통한 제재위원회의 임무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의에 반하는 북한은행의 회원국 내 신규활동, 회원국 은행의 북한 내 신규활동 금지 촉구</li> </ul>
변경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ulk Cash 및 Catch All 도입</li> <li>Trigger 조항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지대상에 사치품 포함</li> <li>항공 관련 제재조치 첫 포함</li> </ul>

03. 08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UN 결의안에 대해 반발

“조선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북남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도 전면 무효화될 것 공식 선언”



일 시	내 용
03. 27	북, 남북한 군 통신선 단절 통보
03. 31	<p>북 노동당 중앙위원회 「경제·핵무력 병진 노선」 채택</p> <p>“자위적인 핵 보유를 영구화하고 그에 토대하여 경제강국건설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해나가자”</p> <p>목표: 인민경제 선행부문 및 기초공업 부문 양성, 새로운 병진으로 전쟁 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높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과 경공업에 역량 집중</li> <li>• 자립적 핵 동력 공업 발전</li> <li>• 통신위성 등 발전된 위성 발사</li> <li>• 대외무역의 다각화, 다양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li> <li>• 경제지도의 근본적인 개선</li> </ul>
04. 01	<p>북 제12기 7차 최고인민회의, 박봉주 전 당 경공업부장이 신임 내각 총리로 임명</p> <p>‘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 법령 제정·발표</p>
04. 02	북, 영변 5MWe 원자로 재가동 조치
04. 04	<p>북,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p> <p>“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분별없는 핵위협은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우리 식의 첨단 핵타격 수단으로 여지없이 짓부셔버리게 될 것”</p> <p>국제 해커그룹 ‘어나니머스’ 북 웹사이트 해킹 김정은 퇴진과 핵무기 포기 요구, 대북 사이버 전쟁 선포</p>
05. 08	<p>한미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및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확인(워싱턴 D.C.) 북핵불용 메시지 및 대화를 통한 북의 태도 변화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근혜 대통령,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제시, “북한의 도발 포기를 전제로 한 경제협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한다”</li> <li>• 오바마 대통령 “평양이 자신의 약속과 의무를 지키고 특히 한반도</li> </ul>

일 시	내 용
	비핵화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 대화를 할 것”, “북한의 핵 및 재래식 무기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 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이행”
05. 10	중국의 4대 국유 은행 모두 대북 송금 업무 중단 해당 은행: 중국은행·건설은행·농업은행·공상은행
05. 22~ 28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방중
05. 28	<노동신문> “미국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희생하면서까지 전쟁 억지력을 일방적으로 포기할 생각은 없다”
05. 31	미 국무부 ‘2012년 국가별 테러보고서’ 북한, 5년 연속 미국 지정한 테러지원국에서 제외 테러지원국(State Sponsors of Terrorism) 지정 국가: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4개국
06. 04	한중 군사회담(베이징)
06. 07~ 08	미중 정상회담(미국 캘리포니아) <주요 논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핵: 북한 비핵화 및 핵보유국 불용 합의, 미중 공조체제 확인, 6자 회담에는 유보적인 입장, 북한에 비핵화 선행조치 요구</li> <li>• 사이버 보안: 고위 실무급 채널 구축 합의, 미·중에 사이버 해킹 심각성 인식 촉구, 중국은 “우리도 사이버 공격 피해자”</li> <li>• 기후변화: ‘수퍼 온실가스(수소불화탄소:HFC)’ 감축 공동노력 합의</li> <li>• 영토분쟁: 미국, 중국에 긴장 완화 및 평화적 해결 촉구, 중국, 영토 수호 의지 확인. 대화 노력 표명</li> <li>• 경제협력: 미국,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지적, 중국은 미국의 대중(對中) 고급기술 수출 제한 완화 및 중국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 환경 개선 요구</li> </ul>

일 시	내 용
06. 10	남북 양측, 판문점 장관급 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 '남북당국회담' 12일부터 1박2일간 서울 개최 합의
06. 17~ 18	<b>주요 8개국(G8) 정상회의</b>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러시아, 탈북자 인권 통합성명 발표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도록 폐기해야 한다"
06. 21	<b>UN 주재 북한대표부, UN에서 기자회견</b> 신선호 UN 주재 북한대사 참여, 주제는 '한반도 상황(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한국 내 UN군 해체와 UN의 대북한 제재 중단 요구
06. 27~ 30	<b>박근혜 대통령 방중, 한중 정상회담(베이징)</b>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 FTA: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협정 체결 목표" 재확인</li> <li>• 정치·안보적 협력 포괄적 확대: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측은 UN 안보리 결의 및 9·19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li> <li>• 북핵 문제: "양측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양자 및 다자대화를 강화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6자회담 재개의 긍정적 여건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li> </ul>
07. 16	파나마 정부, 북 선적에서 발견한 미사일 부품으로 의심되는 적재물에 대한 UN조사 요구
08. 27	<b>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방북</b>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회담
09. 23	<b>중, 대북 수출 금지 품목 공개</b>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군민 양용기술 및 생화학무기 생산가능품목

일 시	내 용
09. 26	<p>&lt;평양방송&gt; 북한대표단장이 UN 고위급회의 연설에서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향하는 것은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 보도</p>
10. 03	<p>&lt;38노스&gt; 북한이 핵무기 1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영변의 5MWe급 가스 흑연 원자로를 재가동했다는 더 많은 증거 발견</p>
10. 08	<p>국정원, 지난 8월 5MWe급 영변 원자로 시설을 재가동하고, 평북 동창리 기지에서 비슷한 시기에 장거리 미사일 엔진 연소실험 실시 확인</p>
10. 09	<p>&lt;중앙통신&gt; “대화과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p>
10. 12	<p>북 국방위원회, 미 정부에 ‘대북고립 압살정책’ 철회 요구</p>
10. 14	<p>통일부, 북의 핵시설 영변 원자로 2기와 원자력 발전소 3기 등 15개이며 대부분이 영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p>
10. 23	<p>북 외무성 대변인, “외부의 핵위협이 가중되는 한 그에 대처할 핵 억제력도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p>
10. 23	<p>&lt;38노스&gt; “최근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풍계리 핵실험장 서쪽 및 남쪽에서 두 개의 새로운 갱도 입구와 이곳에서 파낸 흙을 쌓아놓은 더미가 관찰됐다”</p>
10. 30	<p>&lt;노동신문&gt; “우리의 핵 억제력은 그 무엇과 바꾸기 위한 흥정물이 결코 아니다”</p>
10. 31	<p>북 외무성,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일방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일은 없을 것”</p>
11. 04~ 11. 08	<p>우다웨이 방북</p>

일 시	내 용
11. 11	<p>&lt;노동신문&gt; 미국 정부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데 대해 “우리의 대답은 미국이 우리에게서 그 어떤 사전조치가 먼저 취해지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p>
11. 19	<p>&lt;노동신문&gt; “미국, 전제조건 내세운 대화 타령 말아야”</p>
11. 22	<p>중, 6자회담 7개항 조정안 제시  미 측 수석대표 글린 데이비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확실한 징후가 없는 상태에서 6자회담에 복귀하는 데 관심이 없다”</p>
11. 25	<p>북 외무성 대변인,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바라지만 미국이 고집하는 부당한 전제조건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  &lt;노동신문&gt; “미국의 ‘핵무기 없는 세계’ 타령은 본질에 있어서 미국의 핵만이 남아있는 세계”</p>
12. 03	<p>&lt;노동신문&gt;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북침 핵전쟁 도발책동이 계속되는 한 핵 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할 것”</p>
2014. 01. 06	<p>박근혜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핵문제 및 ‘통일대박론’ 언급 “북한의 도발가능성에 대비하여 빈틈없는 안보태세와 위기관리체제를 확고히 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며 평화통일 기반 구축”</p>
01. 20	<p>&lt;노동신문&gt; 이란 핵협상이 타결됐음에도 미국 의회가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난</p>
01. 27	<p>글린 데이비스와 우다웨이, 미·중 수석대표 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 등 협의</p>

일 시	내 용
01. 29	지재룡 주중 북 대사, “우리는 6자회담 재개지지”  글린 데이비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우리는 북한이 태도와 행동을 바꾸길 희망한다”
02.17~ 02. 20	류전민(劉振民) 중 외교부 부부장 등 외교부 대표단 방북, 박의춘 외무상 만나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추진 문제에 대한 대화
03. 05	북 인민군 ‘전략군’ 대변인 담화,  지난달 21일~이달 4일 ‘로켓 발사훈련’은 “우리 혁명무력의 모든 군사 행동은 예외 없이 우리의 영공, 우리의 영해, 우리의 영토를 위주로 하여 나라와 인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정의의 자위적 행동”
03. 17	<노동신문>  “우리는 다종화된 우리 핵타격 수단의 주되는 과녁이 미국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반세기 이상에 걸친 미국의 끈질긴 핵위협 공갈에 종지부를 찍고 침략의 본거지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는 것이 우리의 핵보유의 유일무이한 목적”
03. 17	中 6자회담 수석대표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방북
03. 27	UN 안전보장이사회, 북의 탄도 미사일 발사 규탄 언론 발표문 채택
03. 28	<드레스덴 선언> 박근혜대통령,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발표
04. 04	북 리동일 UN 주재 차석 대사, “미국의 압박이 계속 될 경우 새로운 형태의 핵 실험을 할 것”
04. 11	한·중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베이징에서 양자회담 통해 6자회담 재개 문제 등 협의
04. 21	풍계리 핵실험장 가림막 설치·차량 움직임 증가 포착

일 시	내 용
04. 23	박근혜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전화통화로 북의 잦은 핵실험 징후 등 유동적인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 교환
04. 25	<p>&lt;38노스&gt; 북 4차 핵실험 우리농원료 사용 가능성 제기</p>
04. 25~ 26	<p>한미정상회담(서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협의: 한국군의 킬체인(Kill Chain), 미사일방어체계(KAMD)구축 등을 고려해 10월 경,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최종결론</li> <li>● 양국 정상은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중요성 공감</li> <li>● 북핵 불용에 대한 입장 재확인</li> </ul>
04. 28	<p>추귀홍(邱國洪) 주한중국대사</p> <p>“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갖고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것에 반대”, “우리는 북한의 동선을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p>
05. 07	CNN, 풍계리 갭도 입구에 가림막이 설치된 모습이 미군 정찰위성에 잡혔다고 보도
05. 10	<p>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p> <p>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 “북한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바뀌지 않았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p>
05. 20	北 리용호 6자회담 수석대표 방중
05. 23	북 6자회담 수석대표 리용호 외무성 부상, 몽골에서 조엘 윌트(Joel Wit)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초빙교수, 로버트 칼린(Robert Carlin) 스탠포드국제안보협력센터 연구원, 관료출신 전문가와 접촉
05. 26~ 28	북-일,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과 대북제재일부해제를 골자로 한 스톡홀름 합의

일 시	내 용
06. 05	<p>&lt;조선중앙통신&gt;                      “미국이 ‘전략적 인내’라는 어리석은 망상을 고집한다면 북미 핵 해결의 최후 승리는 정의의 핵을 틀어쥔 조선에 있다는 역사의 이치가 미국의 종말로 증명될 것”이라 주장</p>
06. 13	<p>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남한이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배치하려고 시도한다며 핵 억제력 강화로 대응할 것”</p>
07. 03	<p>한중정상회담(서울)                      두 정상은 북핵문제와 관련,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북한의 4차 핵실험을 포함한 ‘북핵 불용’의 입장을 재확인하였으나 북한이나 북핵을 명시하지는 않음</p>
07. 14	<p>강석주 북 노동당 비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훈련에 대한 대항수단”</p>
07. 17	<p>UN 안전보장이사회, 북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                      “UN안보리이사국은 6월말과 7월초 북한의 3차례 스커드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주목한다”, “안보리 이사국은 이러한 발사가 UN안보리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 )결의 위반임을 규탄한다”</p>
07. 20	<p>북 국방위, 미사일 발사와 포 사격 훈련은 “자위력 강화를 위한 합법적인 자주권 행사”</p>
07. 23	<p>올리 헤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 북이 우리늄 농축공정 P-2원심분리기 기술 이란에 이전 우려</p>
07. 28	<p>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자주권 위협하면 美 본토 핵공격 할 것                      아세안지역안보포럼, 北미사일 우려 의장성명 채택                      북한이 핵포기를 약속한 2005년의 6자회담 공동성명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을 조기 재개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p>



일 시	내 용
08. 06	미국의 핵군축 연구기관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지난 6월 30일에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을 지난 4월 사진과 비교 분석한 결과 원심분리기가 들어선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에서 계속 건설 작업이 진행됐다고 밝힘.
08. 11	아세안지역포럼(ARF) 북측 대표단으로 참가한 최명남 북 외무성 부국장, 약식 기자회견에서 4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에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계속 박차를 가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어떤 행동도 다할 권리가 있다” 주장
08. 27	미의 정치군사전문 웹진인 ‘워싱턴 프리 비컨’, 26일(현지시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을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면서 SLBM을 전력화하기 위한 수직발사대를 설치할 수 있는 3천급 이상의 잠수함 개발가능성 언급
09. 05	IAEA, 연변 핵시설에 핵폭탄 제조용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흑연 원자로의 가동을 보여주는 수증기와 냉각수의 배출 확인
09. 11~ 12	강석주 북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 유럽순방 통해 유럽연합(EU)의 스타브로스 람브리니디스 인권특별대표, EU, 벨기에, 스위스 정부관계자 회동
09. 23	<38노스> 핵미사일 개발 과학자 광범위한 세대교체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의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과학자들의 광범위한 세대교체가 진행 중임. ‘노스 코리아 리더십 워치’를 운영하는 마이클 매든의 기고문을 인용, 지난 7월 초 숨진 전병호 전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가 비서직을 내놓은 2010년 이후 북한 핵-미사일 연구진 내부의 변화가 두드러졌으며 전병호 전 비서의 업무를 박도춘 비서와 주규창 당 기계공업 부장이 물려받음. 또한 세대교체 과정에서 부상한 핵심 인물로 조춘룡 제2경제(군수경제)위원장과 당 기계공업부의 홍승무, 홍영철 부부장 등 3명을 꼽음”

일 시	내 용
09. 26	IAEA, 영변 원자로 재가동 징후와 관련, 핵 활동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흑연감속로의 재가동과 우리늄 농축시설 확충 등 북의 모든 핵 활동 강력 규탄”
09. 27	새뮤얼 라클리어(Samual J. Locklear III) 미 태평양 사령관, “북, 미국 본토위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실전배치 수순”
10. 05	미 핵군축 연구기관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 “연료봉 교체나 내부 시설 보수 작업 등에 기인한 영변 5MWe급 원자로 가동 중단 포착”

## [ 3차 핵실험 이후 미사일 및 발사체(운반수단) 발사 현황 ]

일 시	내 용
2013. 02. 10	북, 단거리 미사일 발사 동해안서 KN-02(추정) 단거리미사일 발사
02. 12	북, 제3차 핵실험
03. 15	북, 단거리 미사일 발사 동해안서 KN-02(추정) 단거리미사일 2발 발사
05. 18	북, 단거리 미사일 발사 동해안 북동쪽 방향으로 단거리 미사일 3기 발사
05. 19	북, 단거리 발사체 발사 동해 북동쪽 방향으로 이동식 발사차량을 이용한 단거리 발사체 1발 발사(신형방사포 가능성 포착)
05. 20	북, 단거리 발사체 발사 오전 11~12시 사이 동해안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KN-02(지대지)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 발사
09. 17	북, 엔진연소실험 평북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서 엔진연소실험
09. 23	북, 엔진실험 서해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로켓 엔진실험
2014. 02. 21	북, 방사포 발사 호도반도에서 300mm 신형 방사포 4발 발사
02. 27	북, 탄도미사일 발사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일대에서 북동방향 해상으로 사거리 200km 이상 탄도미사일 4발 발사
03. 03	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오전6시 19분, 원산일대에서 북동방향 공해상으로 사거리500km 이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스커드-C추정)
03. 04	북, 방사포 발사 오전6시께 240mm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3발 원산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 오후4시 17분부터 5시 7분까지 원산 인근 호도반도에서 북동방향 공해상으로 신형방사포추정단거리 발사체 4발 발사

일 시	내 용
03. 16	<p><b>북, 단거리 로켓 발사</b>                      원산인근 갈마반도에서 사거리 70km 내외의 단거리로켓, 6시20분 부터 10분간 10발, 8시3분부터 5분간 8발, 9시 28분부터 4분간 7발 씩 총25발 발사(Frog 추정)</p>
03. 22	<p><b>북, 단거리 로켓 발사</b>                      오전4시부터 6시 10분까지 원산 인근 갈마반도 쪽에서 동쪽 방향 해상 으로 3회에 걸쳐 사거리 60km 내외의 단거리 로켓 30발 발사(Frog 추정)</p>
03. 23	<p><b>북, 단거리 로켓 발사</b>                      오전0시 52분부터 2시 21분까지 강원도 원산인근에서 사거리 60km 내 외의 단거리 로켓 16발을 2회에 걸쳐 발사(Frog 추정)</p>
03. 26	<p><b>북, 노동 미사일 발사</b>                      평양 북방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오전2시 35분과 45분에 사거리(650 km 내외의 탄도 미사일 각각1발, 총2발 발사(서부지역에서 내륙 통과 후 동부지역으로 발사된 최초사례)</p>
03. 31	<p><b>북, 해상사격</b>                      서해 북방한계선(NLL)인근서 해안포, 방사포 500여발 발사 등 해상사 격, 일부 포탄 NLL남쪽 우리 측 수역에 떨어짐.</p>
04. 29	<p><b>북, 해안포 발사</b>                      서해 NLL인근 해안포 50여발 발사(해상사격훈련)</p>
06. 26	<p><b>북, 단거리 발사체 발사</b>                      오후5시 원산인근 동해상으로 발사체3발 발사, 사거리 190km</p>
06. 29	<p><b>북, 스커드 미사일 발사</b>                      오전4시 50분과 4시 58분께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사거리 500km 의 스 커드미사일 각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p>
07. 02	<p><b>북, 단거리 발사체 발사(시진핑 방한 하루 전)</b>                      오전6시 50분과 8시에 동해상으로 300mm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 사체 2발 발사</p>
07. 09	<p><b>북, 스커드 추정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b>                      새벽4시와 4시 20분 2회에 걸쳐 황해도지역일대에서 동북방향의 동해 상으로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은 가운데 사거리는 500여km 내외 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p>

일 시	내 용
07. 13	북, 단거리 미사일 발사 새벽1시20분과 1시30분께 등 2회에 걸쳐 동해상으로 사거리는 약 500여km내외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 발사
07. 14	북, 방사포·해안포 100여발 발사 오전11시 43분부터 오후12시 15분까지 방사포와 해안포100여발 강원도 고성비무장지대(DMZ) 북방한계선 북쪽 수백미터지점에서 동북방향으로 발사
07. 26	북, 탄도 미사일 발사 황해도 장산곶 일대, 동북방향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스커드-C개량형 추정) 1발 발사
07. 30	북, 단거리 발사체 발사 묘향산 일대, 300mm 방사포 추정 단거리 발사체 4발 발사
08. 15	북, 단거리 발사체 발사 원산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5발 발사(300mm 방사포 추정, 사거리 220km)
09. 01	북, 단거리 발사체 발사 북한이 중국 국경 60여km 남쪽인 자강도 용림 인근에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 사거리는 220여km 내외로 판단
09. 06	북, 단거리 발사체 3발 발사 9월 6일 오전 추석을 앞두고 '신형 전술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으며 북한이 사거리 210~220여km인 신형 전술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지난달 14일과 9월 1일에 이어 세 번째로 군 당국은 분석하고 있으며 북한은 기존 전술미사일인 'KN-02'(최대사거리 170여km 추정)보다 사거리가 긴 신형 전술미사일의 성능개량을 위해 잇따라 시험발사를 하는 것으로 분석